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KINU 연구총서 23-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 현승수 | 김남은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연구책임자

이기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현승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남은(한림대학교 HK연구교수)



KINU

일본 기사다 정부의 대외전략

KINU 연구총서 23-23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저자	이기태, 현승수, 김남은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인쇄처	명문인쇄공사(02-2079-9200)
I S B N	979-11-6589-149-7 93340
가격	8,000원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차례

요약	7
----	---

Chapter I

서론	11
----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3
2. 연구 내용 ————— 17

Chapter II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	21
-------------------------	----

1. 미중 전략경쟁 영역의 다변화와 갈등의 심화 ————— 23
2. 미국의 가치동맹 결속과 중국 견제 강화 ————— 30
3. 중국의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 강화 ————— 35

Chapter III

기시다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41
----------------	----

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식과 대응 ————— 43
2. 외교안보전략 기초 ————— 45
3. 안보위협 인식과 안보정책의 대전환 ————— 49

Chapter IV

기시다 정부의 협력외교	59
1. 미일동맹 강화	61
2.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안보 네트워크 확대	69
3. 한미일 3국 협력	76

Chapter V

기시다 정부의 위협대응 외교	81
1. 기시다 정부의 대 중국 전략	83
2. 기시다 정부의 대 러시아 전략	101

Chapter VI

기시다 정부의 대북정책	117
1. 기시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	119
2. 대북 제재: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대응	123
3. 대북 대화: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모색	131

Chapter VII

결론: 한국 정부의 대일전략 제언	139
1. 한국 정부의 대일전략 추진시 고려 사항	141
2. 정책제언	145
참고문헌	14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3

Tables 표 차례

〈표 VI-1〉 일본의 주요 대북 제재조치 128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본 연구는 2021년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의 대외전략을 분석한다. 먼저, 2023년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일본의 대외위협 인식 변화를 분석한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에 일본이 중국, 북한에 가졌던 안보위협에 더해 러시아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관여가 확대되는 등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기시다 정부의 인식을 분석하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한미일 안보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외전략을 분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안도 분석한다.

또한, 기시다 외교를 아베 외교와 비교하면서 ‘연속성’과 ‘단절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시다 정부 대외전략의 전략적 의도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 요인과 대외정책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대만문제 대응, 중국 및 한국과의 역사전(歷史戰) 주장,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아베파는 강경 보수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아베파의 대외전략과 기시다 외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기시다 총리가 표방하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한다.

기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및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힘의 변경,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시험,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주요 안보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거나, 중국의 힘의 변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정부의 대북전략은 아베-스가 정부의 대북전략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전임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일북 간 관계 개선의 조짐 역시 전혀 보이지 않는다.

키워드: 기시다 정부, 대외전략,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한미일 안보협력



Foreign Policy Strategy of Japan's Kishida Administration

Lee, Kitae et al

This study examines Japan's foreign policy strategies of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Administration that took power in 2021. To this end, shifts in East Asia's strategic landscape surrounding Japan as well as in Japan's perception of its external threats in 2023 are examined first. The Russia-Ukraine War that broke out in 2022 has brought a reshuffle of Japan's foreign policy strategies by adding the security threats from Russia, to the long-standing security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exacerbating global food security and energy security, followed by more engagement in 'Global South'.

This study delves into the administration's perception of East Asia's shifting strategic circumstances and analyzes its foreign policy strategies on multiple fronts that include its pursuit of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Additionally, it

examines Japan's response measures to possible Chinese invasion of Taiwan in the aftermath of the Russia–Ukraine War.

When comparing Kishida's diplomacy to Abe's diplomacy, the former is analyzed in terms of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and the strategic intention and overview of th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strategy are outlined herein. To this end, domestic political factors and foreign policy factors are examined, as they have impact on foreign policy strategies unfolded by the administration. The Abe faction, the largest subgroup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exerts a sizable influence on th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strategies. The Abe faction has a hard–line conservative stance on issues such as the Taiwan issue, the “history war” against China and Korea, and North Korean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This study examin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be faction's above–mentioned foreign policy strategies and the administration's diplomacy, and proceeds with an in–depth look into the “realism diplomacy for a new era,” advocated by Kishida.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in Ukraine, the administration is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and promoting the Korea–US–Japan

Keywords: Kishida Administration, foreign policy strategy, free and open Indo–Pacific,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I. 서론

이기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외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2022년 12월 일본은 안보전략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대외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1/} 2023년 3월에는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의 새로운 액션플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2/}

이처럼 기시다 정부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표방한 ‘아베 외교’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3/}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의 총격사망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시다 외교’가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향후 기시다 외교가 전개될 방향을 분석하고

1/ 内閣官房,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令和4年12月16日),” <<https://www.cas.go.jp/jp/siryou/221216anzenhoshou.html>> (검색일: 2023.10.1.).

2/ 外務省, “岸田総理大臣のインド世界問題評議会(ICWA)における総理政策スピーチ(令和5年3月20日),”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477738.pdf>> (검색일: 2023.10.1.).

3/ 통일연구원에서는 2016년에 아베 정부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출판하였다. 이기태·김두승,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1~127.

전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외교의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노선을 계승하는 새로운 기시다 외교를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新時代リアリズム外交)’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베 전 총리가 추구하였던 ‘보통국가 일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 현재 자민당 내 4번째 파벌인 ‘기시다파(岸田派)’를 이끌면서 각각 2번째(아소파, 麻生派)와 3번째(모테기파, 茂木派) 파벌 수장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자민당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과 함께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安倍派)와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면서 아베파의 대외정책을 일단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의 외교안보노선은 아베 전 총리의 외교안보노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FOIP을 계승하면서 발전시키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의 염원이었던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전략 3문서를 개정하면서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표명하였다. 또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제기되면서 센카쿠 제도(尖閣諸島)를 포함한 남서제도(南西諸島) 방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방위비 증액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기시다 정부와 아베파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대만 유사가 곧 일본 유사”라는 아베 전 총리의 인식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아베파 내 친대만파의 움직임과 기시다 정부의 신중한 대중정책은 커다란 정책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시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단순히 아베 정부의 계승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기시다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및 한일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4/} 윤석열 정부는 계속된 한일관계 악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한일 간 최대현안이었던 강제징용공 문제의 해결책을 2023년 3월 6일 ‘제3차 변제안’ 방식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3월과 5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대응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즉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한미일 및 한일 간 안보협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대북 관련 한미일 안보협력의 구체적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임 아베-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밝힌 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 간 만남’을 계승하고 있다. 일북 간에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는 가장 큰 현안이 놓여져 있지만, 일북 협상은 장기적으로 일북 국교정상화 과정을 시야에 두고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북관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비롯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입장에서 북한과의 수교는 일본 전후 처리의 완성이며, 아베 전 총리가 주장하였던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일북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 배상금 문제는 한일 국교정상

4/ 일북관계 관련 최근 통일연구원의 연구보고서로는 2020년에 발행된 연구보고서가 있다. 이기태·배정호·신정화,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일관계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20), pp. 1~167.

화 과정과 대비해서 미래 통일한국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2023년은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격히 움직인 한 해였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중국이 참여하는 중러북 3각협력까지 발전할지는 현재로서 미지수이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러시아의 사할린 투자를 전면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다. 즉 한국,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일본 특유의 실용주의 외교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대화의 여지를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에서 보여주고 있다.

일본 외교의 전통적인 실용주의 외교가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라는 형태로 기시다 정부에서도 얼마만큼 발휘되고 있는지를 일본의 FOIP와 대러, 대중, 대북 정책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도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가 될 것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먼저 2023년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일본의 대외위협 인식 변화를 분석한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에 일본이 중국, 북한에 가졌던 안보위협에 더해 러시아에 대한 안보위협 및 전세계적인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게 하는 등 일본 대외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기시다 정부의 인식을 분석하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한미일 협력체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외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 QUAD 국가(미국, 호주, 인도), 아세안, 유럽 등과의 협력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일본 내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일본 안보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현안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일본의 대응을 분석한다.

무엇보다 기시다 외교를 아베 외교와 비교하면서 ‘연속성’과 ‘단절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의 전략적 의도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시다 정부는 2021년 출범 이후 전임 아베-스가 정부의 대외전략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공을 들였던 대러 외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위로 돌아갔고, 2022년 참의원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 사건과 12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은 향후 기시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전략 전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 요인으로는 자민당 내 최대파벌인 ‘아베파’의 존재가 있다. 2023년 현재 아베파는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

고 있다. 특히 대만문제 대응, 중국 및 한국과의 역사전(歷史戰) 주장,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서 아베파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아베파의 대외전략 인식과 기시다 외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유의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표방하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한다.

기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및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따라 미일동맹의 역할 변화가 예상되는데, 즉 미일동맹에서 기존 ‘창(미국)’과 ‘방패(일본)’의 역할에서 ‘창(미국)’과 ‘짧은 창(일본)’이라는 역할 변화에 따른 일본의 능력 강화 노력을 설명한다.^{5/}

일본의 대외전략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라고 할 수 있다.^{6/} 2023년 개정된 개발협력대강(ODA 대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모든 대외전략은 FOIP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FOIP 추진 동향 분석과 함께 FOIP 추진에 따른 동아시아 안보와의 연관성 파악 및 일본의 대응 양상을 분석한다.

최근 일본이 QUAD 협력 및 미-일-호주, 미-일-필리핀 간 소다자 안보협력을 추진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위협 대응 현황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안보이슈로서 동중국해(센카쿠 제도) 문제, 대만 유사 문제, 해상수송로(남중국해), 북방 영토 문제 등을 분석한다.

특히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대외전략을 분석한다. 일본은 아세안을 중요시하면서 FOIP

5/ 이기태, “III-4. 일본,” 통일연구원 엮음, 『2023 한반도 정세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22), p. 98.

6/ 防衛省, 『防衛白書: 日本の防衛(令和4年版)』(東京: 日経印刷, 2022).

을 초기에는 ‘전략(strategy)’에서 ‘구상(vision)’으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중국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아세안의 입장을 고려해서 구상조차 생략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으로 정착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에 바탕을 둔 FOIP 구상을 분석하면서 향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려고 한다.

기시다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힘의 변경에 대한 우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시험,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주요 안보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에 동참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힘의 변경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전통적 외교방식인 실용주의 외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들 국가들과 대화를 추구하면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기시다 정부의 안보 위협 국가에 대한 대외전략을 ‘위협대응’ 외교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기시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베-스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전임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일북 간 관계 개선의 조짐 역시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북 ‘제재’와 ‘대화’ 차원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의 전개 가능성을 살펴본다.

즉 대북제재 차원에서 한미일 및 한일의 안보협력을 분석한다. 2023년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대북 핵·미사일 대응 및 대북제재 관련 안보협력 사항을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작동하지 않았던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정상화, 북한 미사일의 실시간 조기 경보 체제 구축,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동 대응의 움직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일본의 독자적

인 대북제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제재활동을 설명한다.

또한 대북 대화 차원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시다 정부의 대응을 분석한다. 납치자 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조기 해결을 바라는 일본 국내 여론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및 한국,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움직임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향후 기시다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납치문제와 같은 대북정책 관련 3가지 중요 해결사안에 대한 입장 분석을 통해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시다 정부는 향후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을 통한 총선거 승리 및 2024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 재선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로 들어선다면 아베 외교의 틀을 벗어난 기시다 총리의 독자적인 대외 전략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일본 국내정치 변동에 따른 외교의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전략 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

김남은(한림대학교 HK연구교수)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

1. 미중 전략경쟁 영역의 다변화와 갈등의 심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정세와 세계 경제에 거대하고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동안 국내외 학술·정책공동체 내에서 논의되어왔던 국제사회 내 ‘강대국 경쟁(great power rivalry)’과 ‘힘의 정치(politics of power)’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미국과 서구,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세력권 간 대립을 기본 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고리로 서방 진영의 전례 없는 단결이 초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등의 관계는 탈냉전 시대 이후 가장 큰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은 그 전개와 결과에 따라 현재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복원, 수정·변경, 종식·전환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⁷⁾

7) 장세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분석과 대안』, 제6집 2호 (2022), p. 9.

과거 주요국 간 경쟁은 군사적인 대립과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며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체제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왔다. 미국과 중국은 기존의 체제 내에서 자신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공존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주요국, 특히 미국과 중국은 기존 질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주도의 국제질서와 체제의 새로운 재편을 시도하기 시작했다.^{8/} 이후 미중 간 전략경쟁은 무역, 미래성장의 동력 확보, 국제질서의 재편 경쟁을 넘어 가치와 체제 경쟁으로 격화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영 간의 이원적 대립구도를 재형성하는 계기를 조성했다.^{9/}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그동안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던 러시아가 세계적 질서 재편 과정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자, 주요국 간 가치대립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10/}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첫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 악화와 구체적인 대응조치 마련이다. 2022년 2월 11일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발표했다.^{11/} 이 보고서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국의 상승하는 도전(mounting challenges)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을 정면 겨냥했다. 또한 미국의 전략적 목적은

8/ 최강, “복합경쟁의 시대와 격변하는 세계,”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23-01, 2023.1.2.), p. 11.

9/ 이우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국제질서와 규범의 대립: 지배의 윤리에서 초월적 규범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2집 4호 (2022), pp. 19~21.

10/ 최강, “복합경쟁의 시대와 격변하는 세계,” p. 8.

11/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검색일: 2023.10.1.).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최대한 유리한 영향력의 균형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미국, 동맹 및 우호국이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에 최대한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여 중국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동맹과 공동전선으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협력강화 대상으로는 5개 동맹국(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파트너로 예시했다. 한미일 협력 확대도 10대 단기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대만의 자위 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역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에 이를 알린 것이 2021년 10월이며, ‘한계 없는 협력’ 언급이 나온 중러 정상회담이 2월 4일인 점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판단이 이 전략보고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12/}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 12일 대중국 전략의 종합판이라고 할 만큼 중국을 도전적 경쟁국으로 보는 미국의 시각과 통합억제력 등 미국의 대응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다.^{13/} 이 전략보고서는 먼저 탈냉전 시대의 종식을 고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진입을 선언했다. 미중 전략경쟁을 체제경쟁으로 진단한 것이다.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력, 외

12/ 이한얼,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 미중 전략경쟁에 미친 영향 검토: 상수로서의 중국과 변수로서의 미국,”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제6집 2호 (2022), p. 116.

13/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12,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검색일: 2023.10.1.).

교력, 군사력, 기술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으며,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세계 초강대국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제질서의 기본법을 무모하게 무시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체제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 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중국의 전략적 위협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심하다(most acute)”고 평가하고 있는 점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적이 중국임을 명확히 드러냈다. 즉,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out-competing China)”과 중국을 억제하는 데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이 걸려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14/}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주요국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대만해협 긴장이 미중 전략경쟁 시대 강대국 간 경쟁이 무력시위로 격화된 사례라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핵 공격 위협의 현실화라는 위험한 징후가 표출되었다.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누구든 러시아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세력들은 역사상 초유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며 위협을 가하는 한편, 러시아 핵전력에 대해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15/} 또한 2023년 2월 21일 국정연설에서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3대 핵전력(Nuclear Triad) 증강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국방예산을 기존 계

14/ 이강규, “2022년 동북아 안보정세 평가와 2023년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3.1.4.), p. 2.

15/ “Ukraine invasion: Putin puts Russia’s nuclear forces on ‘special alert,’” *BBC News*, February 28, 2022.

획보다 약 30% 많은 4.9조 루블로 책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병력과 무기를 현 전력의 50% 이상 증강했으며, 유사시 NATO의 전쟁 개입에도 대비하고 있다.^{16/}

한편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위협한 수준으로 낮춘 러시아와 함께 극초음속미사일에 집중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핵탄두 수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여기에 전술핵 능력을 추가하는 북한까지 가세하면서 핵사용의 위험성은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빈도와 강도도 증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는 중러북 3각 연대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7/} 중국에 이어 미국도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2023년 내 실전배치도 계획하고 있어 극초음속 무기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상 발사 극초음속 무기는 배치지역에 따라 역내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18/}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위협인식 고조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서방 국가의 연대 강화와 NATO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서양 동맹의 회복을 공언했지만, 2021년 미군의 일방적인 아프가니스탄 철수, 오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력체) 창설에 대한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반발로 서방 국가 간의 연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다.^{19/} 그런 와중에 발발한 우크라이

16/ 김강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The World and Eurasia』, 제1권 2호 (2022-2023), p. 103.

17/ 최강, “북합정쟁의 시대와 격변하는 세계,” p. 7.

18/ 조남훈·이장욱·조은일, “글로벌 안보정세 전망,” 『2023 국방정책 환경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2), p. 10.

19/ 이동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 대응,”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23-11, 2023.6.14.), p. 2.

나 전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20/}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서 긴밀하게 공조하며 협력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강화했다.^{21/}

그 과정에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2022년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에 가입을 신청하며 NATO가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났다(핀란드 2023년 4월 4일 가입 완료). NATO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여 회원국인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바키아에 다국적 전투단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동유럽 지역의 방어를 강화했다. 또한 집단 방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동유럽에서 여러 차례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루마니아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전투부대가 31개 NATO 회원국의 동부 지역 방어를 테스트하는 군사훈련을 시행하기도 했다.^{22/}

특히 2022년 6월 28일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NATO의 아시아 파트너십 국가로 초청되어 참석한 것은 미국이 유럽연합(EU)과 NATO를 인도태평양 지역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이와 같은 서방 국가들의 연대 강화는 향후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을 시사한다. NATO 회원국들은 이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이해와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23/}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권위주의 국가의 위협성을 경고해

20/ 위의 글, p. 2.

21/ 위의 글, pp. 2~3.

22/ 김강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p. 112.

23/ NATO, “Madrid Summit Declaration,” 2022.6.22., <https://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196951.htm> (검색일: 2023.10.1.).

왔던 미국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 결과이다. 이어 29일에 내놓은 NATO 정상회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담은 『팩트시트(Fact Sheet: The 2022 NATO Summit in Madrid)』는 NATO를 개혁(reform)하고 새로운 안보상황에 맞도록 변형(transform)시키는 <2022년 NATO 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NATO의 아시아 파트너십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 NATO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NATO 2022년 전략 개념>은 처음으로 중국을 ‘조직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명기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간 전략적 연대(China-Russia Strategic cooperation)’를 우려하는 내용도 담았다.^{24/}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 문제와 연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부각되었다. 미국 국방부는 2022년 11월 29일 중국 군사력에 대한 연례 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강조하고 중국을 압박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해석하고 정책화하여, 대만에 대한 외교적 지원과 함께 군사대비태세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의 연계를 통해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 의지를 꺾는 동시에, 미국이 대만 문제의 주요 이해관계자임을 중국에 주지시키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25/}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24/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2년 나토 정상회담,” 『세계 주요 군사동향』, 54호 (2022), pp. 75~85.

25/ 이한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 미중 전략경쟁에 미친 영향 검토: 상수로서의 중국과 변수로서의 미국,” p. 118.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하면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외교적 활동 공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 직후 약 72시간에 걸쳐 대만 포위훈련을 감행했다. 또한 중국은 12월 핵 탑재가 가능한 H-6 폭격기 18대를 동원하여 대만 방공 식별구역(ADIZ)에 진입하는 등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여 2023년 7월 15일 대만 정치작전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정보 및 훈련 부족을 반면교사 삼아, 훈련의 실전 정도를 심화시키고 비대칭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26/} 또한 2023년 6월, 대만 육군의 대대급 부대를 미국 미시간주 훈련시설에 파견하여 처음으로 미군과 합동훈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27/} 미국은 8월 30일 사상 최초로 주권국에 대한 무기 지원 프로그램 ‘해외군사금융지원(FMF)’을 통해 대만에 8,000만 달러(약 1,060억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28/}

2. 미국의 가치동맹 결속과 중국 견제 강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개시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며 대응에 나섰다. 2022년 4월 12일 바이

26/ 위의 글, p. 120.

27/ “대만군, 처음으로 대대급 부대 미국 파견...미군과 합동훈련,” 『연합뉴스』, 2023.7.24.

28/ “美, 대만에 ‘동맹국 무기 지원’ 첫 적용... 사실상 주권국가 대우,” 『동아일보』, 2023.9.1.

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처음으로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 학살)’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금융제재, 수출규제, 에너지 관련 금수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또한 즉시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이상의 긴급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이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어 4월 28일 미 의회가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가결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실시간, 무제한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위해 33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29/} 이는 미 국무부 예산의 절반 이상의 규모이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값이 싸지 않다. 그러나 장래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초래될 위험부담을 감축시킬 수 있는 약소한 비용”이라고 전쟁의 가치를 강조했다.^{30/} 12월 5일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2월 침공 이래 점령한 영토를 수복할 때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2월 19일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으며, 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군사원조계획도 발표했다.^{31/} 2023년 9월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규모는 1,100억 달러(군사원조 496억 달러, 경제지원 285억 달러, 인도지원 132억 달러, 미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 184억 달러) 이상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의회에 군사지원 140억 달러를 포함한 추가지원 240억 달러 승인을 요청한

29/ 김일수,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민족연구』, 제80호 (2022), pp. 45~47.

30/ 주재우,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국제질서, 미중관계와 우리의 대응전략,” 『전략연구』, 제85호 (2022), pp. 135~136.

31/ “바이든, 우크라 깜짝 방문… “푸틴이 틀렸다,” 『조선일보』, 2023.2.21.

상태다.^{32/}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경제지원과 함께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했다. 중국 견제를 보다 심층적·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2022년 5월 23일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의 공식 출범, 자국 기업의 해외, 특히 중국 내 공장을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및 우방국들의 공장도 미국 내로 옮기도록 요청하는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33/} 이는 주요 첨단산업 부문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를 미국과 우방국들이 독점하겠다는 의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IPEF 출범 시기에 박차를 가한 이유는, 중국이 주도하고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2022년 2월 1일 공식 발효된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이 RCEP를 통해 세계경제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미국의 경제봉쇄를 어느 정도 극복할 계기를 마련하게 되자, 미국은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를 제안했고, 그로부터 7개월 만에 출범이 이루어진 것이다.^{34/} 또한 IPEF 출범이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와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사실상 중국 견제 협력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는 쿼드 회

32/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BBC NEWS 코리아』, 2023.9.21.

3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국제정세전망』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p. 55.

34/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한반도는 안전한가,” 『참세상』, 2022.4.8.

의에 이어 IPEF 출범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IPEF에 쿼드 회원국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참가했다는 점은 IPEF가 향후 중국 견제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35/}

미국은 1970년대부터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7개국 정상회의(G7)를 확대해 중국을 고립화하는 전략도 강화했다. 2021년 6월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신장자치구 인권존중, 홍콩 자치 보장, 대만 위협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원조 프로그램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 구상을 제시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2023년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 격상 및 러시아에 대한 제3국의 물질 지원 중단을 위한 제재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러시아와 중국에 경고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 경제 작동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이전과 경제적 강요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첨단기술을 보호하자는 이슈도 제기했다.^{36/}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110여 개 국가의 정상들을 초대해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역시 동맹국을 동원해 ‘민주주의 대 독재’ 프레임으로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군사 영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9월 15일 공식 출범시킨 오커스(AUKUS)와 트럼프(Donald John Trump) 시기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해 부활한 쿼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협의체로서 작동하고 있다. 쿼드가 안보 중심의 비공식 협

35/ 아산정책연구원, “복합경쟁의 시대와 격변하는 세계,” p. 5.

36/ “G7 Hiroshima Leaders’ Communiqué,” 2023 HIROSHIMA SUMMIT, May 20, 2023.

의체라면,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전수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뚜렷한 군사적 목적을 지닌 동맹이다. 쿼드 참여 4개국은 2021년 3월 화상 정상회담에 이어, 오커스 출범 직후인 9월에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어 중국 견제 전략을 구체화했다.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가 지역 및 세계 주요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행사로서 쿼드 정상회의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37/} 2022년 5월 제4차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기술안보와 공급망 등에서 대중국 견제망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특기할 점은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회원국인 인도가 유엔의 대러 규탄 결의안에 모두 기권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인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이 400%나 증가했으며, 러시아에서 싼 석유 등의 에너지를 수입해 자국의 물가 오름세를 막는 데 이용했다. 또한 자국 화물선을 동원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송함으로써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무력화했다.^{38/} 인도의 이 같은 태도는 냉전기부터 이어져온 러시아와의 오랜 신뢰 관계와 중국에 대한 균형자로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때문으로 평가된다. 또한 냉전기 전통에 따른 국제 문제에 대한 중립 경향과 미국에 대한 회의주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39/} 이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국이자 쿼드 참가국 중 유일하게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은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추

37/ 김기범, “쿼드 정상회의의 결과와 한국 국방전략에 대한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2.6.16.), pp. 1~5.

38/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극체제의 입구?” 『한겨레』, 2023.3.23.

39/ 장세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pp. 21~22.

진하고 있다. 나토, 쿼드, 오키스,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의 5개국 정보협력체)에 더해, 중국을 견제하는 최첨단 군사기술 동맹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과 전략에 대해 유럽 국가들은 예상 밖의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40/} 특히 일본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공동보조를 맞추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자유주의 가치동맹을 강조하고 미국과 쿼드 협력을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모두 적극적이다. 반면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유엔의 대러 규탄 결의에 기권했으며 경제 제재에 불참했다. 중동 국가들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러시아의 중동 정책이 획득한 성과와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회의론 때문으로 평가된다. 또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도 러시아를 반식민주의 투쟁을 지원한 소련의 계승자로 간주하며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41/}

3. 중국의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 강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신중하고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40/ 유럽은 국제질서의 다극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 간 이해의 충돌과 갈등이 가시화되면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 또한 개별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양자관계는 하나로 묶어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특수한 성격들을 내포하고 있다. 장세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pp. 18~19.

41/ 장세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p. 22.

보이고 있다. 중국에게 러시아는 다극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 협력국이며, 특히 양국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의 대러 제재,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등을 계기로 정치, 군사, 경제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며 미국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42/}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NATO 중심의 서방 세력권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막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 별이는 대리전으로 인식하고,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43/} 중국은 2022년 3월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결의’나 ‘인도적 상황 결의’에 기권했으며, 4월 7일에 통과된 ‘러시아의 인권위원회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에도 반대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중국은 2022년 러시아산 원유, 석탄, 천연가스를 대규모로 수입했고, 전쟁으로 높아진 유가와 가스 가격 덕분에 2022년 중러 간 양자 교역은 최대치를 기록했다.^{4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우호적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거부하는 등 매우 복잡적이고 다소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종전에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과도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월 4일,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발표한 중러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우정은 제한이

42/ 이동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 대응,” p. 2.

43/ “NATO’s proxy war highlights urgent need for a multipolar future,” *Global Times*, 2023.2.17.

44/ 이동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 대응,” p. 6.

없고, 금지된 협력 분야도 없다”는 내용의 무한한 협력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이틀 후인 2022년 2월 26일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중국 측의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5개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문에서 그는 “각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정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과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확실히 준수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히며 주권원칙과 유엔헌장의 존중을 강조하는 한편, “NATO가 그 세력을 동쪽으로 무단히 확장해 나가는 상황 아래, 안보 방면에서 러시아의 정당한 요구는 마땅히 중시되어야 하며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의 원인을 서구와 NATO에게 전가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그 해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대화와 담판을 촉구하고 유엔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요청한 것이다.^{4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창이던 3월 7일에도 왕이 외교부장은 중러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이며, 중러 협력은 양국 국민에게 이익과 복지를 가져다주며,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46/} 또한 4월 1일에 발표한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견지하는 5개 사항’에서는 처음으로 서구와 국제사회에 대해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는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 성명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언급하며 “아시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이 해당 지역에 집단적인 저항의 화근을 끌어들여 지역 일체화 작업의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47/}

45/ 주재우,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국제질서, 미중관계와 우리의 대응전략,” pp. 136~137.

46/ 김선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응: 한반도 외교안보에 주는 함의,” 『국제지역연구』, 제26권 4호 (2022), p. 117.

2023년 2월에 열린 양회 업무보고에서 친강(秦剛) 외교부장 또한 “중러 관계가 비동맹, 비대항,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토대 위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제3자의 방해나 도전도 받지 않을 것”이고, “세계가 불안할수록 중러 관계는 안정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겨냥해서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폭주한다면 아무리 많은 가드레일이 있어도 탈선과 전복을 막을 수 없고 충돌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시진핑 주석도 이례적으로 미국을 지목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억제, 포위, 압박을 통해 중국의 발전에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대립과 경쟁구도 속에서 국가 전략능력의 극대화 실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안, 외교, 국방, 곡물, 석유, 물자 비축 등 안보 관련 예산을 12.2%로 대폭 증가시켰다.^{48/} 과학기술, 금융, 데이터, 사회안보를 담당하는 ‘중앙과학기술위원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가데이터국’, ‘중앙사회공작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등 안보에 초점을 둔 제도 개혁을 통해 미중 경쟁을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49/}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연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이루어진 2023년 3월 23일 중러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되는 미국 주도의 서방 동맹에 맞서려는 양국의 결속과 연대를 상징했다. 두 정상은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냉전 때 형성된 것과 유사한 군사·정치 동맹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47/ 김선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응: 한반도 외교안보에 주는 함의,” p. 137.

48/ 왕신첸, “안보의제” 강조한 2023년 중국 ‘양회,’” 『한겨레』, 2023.3.26.

49/ 위의 글.

형태의 국가 협력보다 우월하다”고 천명하고, 전략적·경제적 협력에 관한 2개의 전반적 성명 외에 삼림·극동과 북극해 개발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모두 14개의 성명과 협정, 의정서를 체결했다.^{50/} 또한 “NATO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상호 영토보전을 지지하며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도 재확인했으며, 모든 형태의 대러 제재에 반대하는 등 강력한 반미연대를 과시했다.^{51/} 2023년 9월 15일에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변함없는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52/}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개최된 중러 간 정상회담은 미국의 중국 압박으로 추동된 측면이 큰 만큼 양국 연대의 반미 성격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50/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극체제의 입구?” 『한겨레』, 2023.3.23.

51/ “반미연대로 뭉친 시진핑·푸틴 美, 세계안정 훼손 말라.” 『연합뉴스』, 2023.3.22.

52/ 이동규, “중국식 현대화로 미국과의 복합경쟁에 나서는 중국,” 『2023 아산국제정세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2), p. 49.

Ⅲ. 기시다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김남은(한림대학교 HK연구교수)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기시다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식과 대응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발 빠르게 대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던 다음날인 2022년 2월 25일,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 전쟁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지적하고, “G7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정 및 수출통제 분야에서 미국 및 유럽 국가와 보조를 맞춰 유사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53/}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후인 2022년 2월 26일, 일본은 첨단기술 제품 수출통제와 금융기관 자산 동결 그리고 비자 발급 중단을 포함하는 대러 제재 목록을 공개했다. 2023년 3월 31일에는 철강과 철강 제품, 굴착기 등의 건설 기계와 무인기를 비롯한 항공기 및 부품, 항공기와 선박용 엔진 등도 대러 제재 목록에 추가했

53/ 首相官邸, “岸田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22, 2, 25.,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2/0225kaiken2.html> (검색일: 2023, 11, 1.).

다.^{54/} 이어 5월 26일에는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의 간부와 무기상 등 개인 24명과 78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러시아군 관련 단체 등 80곳에 대해서는 산업 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품 등의 수출 금지를 결정하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55/} 이는 앞서 열린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제재 회피나 우회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일본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 열흘 이상 관망했던 것과 비교해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이었다. 또한 그동안 일본이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또 무력분쟁 당사국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의 조치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일본이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56/}

2022년 4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외교청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진전에 따라 세계와 일본이 전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정세 인식을 표명했다.^{57/} 기사다 총리는 6월 상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로 알려진 아시아안보회의(Asia Security

54/ 経済産業省,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に基づく輸出貿易管理令等の改正について(ロシアの産業基盤強化に資する物品の輸出禁止措置),” 2023.3.31.,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1_seido/04_seisai/downloadCrimea/20230331gaiyo.pdf> (검색일: 2023.11.1.).

55/ 経済産業省, “ウクライナ情勢に関する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に基づく措置について,” 2023.5.26.,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9717.html> (검색일: 2023.11.1.).

56/ 윤석정, “우크라이나 전쟁과 일본의 대외 정책,”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51, 2023.4.), p. 1.

57/ 外務省, 『外交青書(令和4年版)』(東京: 日経印刷, 2022).

Summit) 기조연설에서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58/}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에게 영향을 미쳐 대만 유사 사태로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무기제공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어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의 차관과 함께 전후 최초로 방탄복과 비상식량 등 전투물자를 지원했다. 이는 일본의 대외전략 기축인 미일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가치인 힘에 의한 일방적인 질서변경 및 국제법 준수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현존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59/}

2. 외교안보전략 기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형성된 정세 인식이 일본의 대외전략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 방향은 강력한 중국 억제 중심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외교의 반경 확대를 통한 안보 자율성 및 외교 역량 강화를 꾀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이를 ‘주장하는 외교’, ‘가치지향 외교’,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 ‘적극적 평화주의’ 등의 용어로 표현한다. 기시다 총리가 2022년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공식 표명한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계 강화 및 확대, 미일동맹 강화,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인도태평양 협력의 확대, 우주·사이버·

58/ 권보람, “2022년 제19회 상그릴라 대화의 주요 특징과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2.6.23.), p. 4.

59/ 권태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군사논단』, 제109호 (2022년 봄), p. 74.

전자전 등 신안보영역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표방하고 있다.^{60/}

또한 기사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2006년 ‘자유와 번영의 호(弧)(Arc of Freedom and Prosperity)’에서 출발하여, 2012년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를 거쳐, 2016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수렴된 개념이다. 아베 총리가 2016년 8월 27일 케냐 제6차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VI)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본의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두 대양을 매개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두 대륙을 연결하여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하나의 해양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61/} 다시 말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치의 수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군사적, 정치적 공고화를 추진하고, 또 이를 확장시켜 인도, 호주, 한국, 아세안 지역을 엮어내며 해양세력을 결집한다는 것이다.^{62/}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 강화를 견제하고,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63/}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일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합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은

60/ 首相官邸, “第二百八回国会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 2022.1.17.,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2/0117shiseihoshin.html> (검색일: 2023.11.1.).

61/ 外務省, “TICAD VI開会に当たって・安倍晋三日本国総理大臣基調演説,” 2016. 8. 27., <https://www.mofa.go.jp/mofaj/af/af2/page4_002268.html> (검색일: 2023.11.1.).

62/ 최희식,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해양안보보장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 61권 4호 (2018), p. 118.

63/ 최희식·이기태, “일본: 능동적 방위전략 전개와 영향력 확대.” 『2022 동아시아전략평가』 (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3), p. 244.

미일 양국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베 외교안보노선의 계승을 표방한 기시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미국, 호주, 인도, 유럽,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대만 등과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64/} 아베 시기의 FOIP와의 차이점은 유럽과의 협력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과 협력대상국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2년 5월 23일 미일 정상회담 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강화’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65/} 공동성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강력한 관여 의지와 견고한 대일방어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기술, 경제, 기후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유럽 지역의 동향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실질적 안보위협으로 간주하는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유도하고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다각도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는 컸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를 향해 인도태평양 전략이 필연적으로 일본의 독자적 방위력 강화를 전제로 한다는 당위성도 주장했다.^{66/} 2023년 1월 13일 미일 정상회담 뒤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는 국방력이 뒷받침된 외교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67/} 그리고 2022년 12월

64/ 위의 글, p. 245.

65/ 外務省, “日米首脳共同声明 ‘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の強化,’” 2022.5.23., <https://www.mofa.go.jp/mofaj/na/na1/us/shin4_000018.html> (검색일: 2023.11.1.).

66/ 김남은, “21세기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 중국위협에 대한 전략과 지역구상,” 『일본학』, 제60집 (2023), p. 159.

16일에 공표된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증강계획’ 등 3개 안보문서 개정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정부는 경제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021년 10월 출범 당시 ‘경제안보 담당 대신’ 직위를 신설했으며, 2022년 5월 11 일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통과되었다.^{68/} 이 법에 근거해 각 성청 간 정책조정을 위해 7월 1일 ‘경제안전보장추진실’이 내각부에 설치되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사이버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기간 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일본의 기술력을 배양하기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특허 비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안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 즉 일본이 자국 내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중국 등 타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 자국의 우수한 인재 양성,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지향한 조치로 볼 수 있다.^{69/} 또한 기시다 정부는 2022년 5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합의하고 수출관리, 공급망 보호,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포함 기술 투자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 추진도 목표로 하고 있다.

67/ 위의 글, pp. 159~160.

68/ 内閣官房, “新しい資本主義のグランドデザイン及び実行計画: 人・技術・スタートアップへの投資の実現,” 2022.6.7.,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pdf/ap2022.pdf> (검색일: 2023.11.1.).

69/ 최은미, “새로운 질서 구축의 선봉에 서려는 일본,” 『2023 아산국제경제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2), p. 62.

3. 안보위협 인식과 안보정책의 대전환

기시다 정부 들어 안보위협 인식이 국제사회의 불안과 맞물려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른 대응 역시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한다”는 방침에 기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22년 7월 22일에 각의 결정한 방위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러 간 긴밀한 군사협력이 역내 안보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일본의 방위태세, 방위능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70/} 특히 미일동맹의 대중국 억제력과 대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국과의 협력, 일본 자체 방위력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서는 먼저, “현재 국제사회는 전후 가장 역동적인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21세기 중에 가장 위기가 고조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전후 국제질서와 구도를 변경”하려는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동맹국들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실시한 일본 주변 해상·공중 합동 훈련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며, 중국이 “작전수행능력 강화와 더불어 기존 국제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동중국해를 비롯한 인근 해상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기정사실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71/} 미중관계를 다룬 항목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의 미중 군사력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미중 전략경쟁 심화가 역내 안보위협을 가중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72/} 백서는 센카쿠 제도 인근 해상에 대한 중국 해안경비대

70/ 防衛省, 『防衛白書: 日本の防衛(令和4年版)』.

71/ 김남은, “21세기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 중국위협에 대한 전략과 지역구상,” p. 149.

의 진입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점, 중국 군용기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긴급발진이 2016년 851회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래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중국 해군의 전투함정부대가 일본 인근 해역을 항해하며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귀환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73/} 또한 이에 대해 백서는 중국이 “일본 근해에서의 항해를 통해 태평양으로의 진출의 ‘정상화’를 꾀하는 동시에, 공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공해에서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2022년도 방위백서는 2021년도 방위백서에 비해 대만 관련 내용을 2배로 늘려 기술한 것이 특징이었다. 백서가 “대만이 중국의 어떠한 공격에도 맞설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주목된다.^{74/}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기술이 백서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5/}

이외에도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76/} 이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일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일본 총리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언론들은 중국 대표도

72/ 위의 글, p. 150.

73/ 위의 글, p. 149.

74/ 防衛省, 『令和4年版 防衛白書: わが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 台湾の軍事力と中台軍事バランス』, <<https://www.mod.go.jp/j/press/wp/wp2022/html/n130303000.html>>, 재인용: 위의 글, pp. 149~150.

75/ 위의 글, pp. 150~151.

76/ “기시다, 시진핑과 회담 앞두고 “중이 주권침해”, 『동아일보』, 2022.11.15.

참석한 다자 회의에서 중국 국가명을 거론하며 정면에서 비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77/} 기시다 총리는 중국이 사실상 해양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남해 9단선, 무인도·암초 등에 인공섬을 조성하여 군사기지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중 대립이 일본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78/}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의 수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79/} 한일 국방협력에 대해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한미, 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기술했다.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에는 해상자위대 육일기, 초계기 레이더 조사, 지소미아, 독도방어훈련 등이 포함된다. 독도방어훈련은 전년도 방위백서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2021년 6월 15일 한국 해군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군경 합동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백서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18년째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 독도방어 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기시다 정부가 독도영유권 도발 수위를 높인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백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라는 해설을 추가하여 한국의 국방 분야 동향에도 주목했다. 한국의 국방비가 2000년부터 22년 연속으로 증가하여 이미 2018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일본의 1.5배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80/}

77/ “스가 “동중국해에서 日 주권 침해 활동 계속”…중국 견제,” 『머니투데이』, 2020.11.15.

78/ 김남은, “일본이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 대북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일본공간』, 제32호 (2022), p. 72.

79/ 김호준, “日방위백서, 독도방어훈련 등 ‘韓방위당국 부정적 대응’ 규정,” 『연합뉴스』, 2021.7.13.

이러한 정세 인식에 기초하여 백서는 동맹국 및 협력 국가들과의
결속 강화와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를 주장했다. 첫째, 미일동맹 역
제력과 대응력 강화, 둘째, 일본, 미국, 호주의 협력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불법적인 영향력 확대에 대응, 셋째, 쿼드 협력 심화,
넷째,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 이를 위해 해상자위대
함정의 유럽 주요 국가 항구 친선 방문, 해양에서의 항행의 자유 원
칙을 공유하면서 일본과 유럽 국가와의 협력 증진, 다섯째, 자유롭
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보편적 가치를 저해하는 일부 국가의 행
위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집단적 안보
협력 등을 통한 일본 방위력 향상을 주장했다.^{81/}

특히 백서가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
는 ‘반격능력’을 처음으로 주장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82/} ‘반격
능력’은 상대가 공격에 착수한 후에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가 공격하기 전 공격하는 선제공격과는 성격이 다르
다고 강조했다.^{83/} 백서는 “일본 주변 극초음속 활공무기나 변칙궤도
로 비상하는 미사일 등 기술이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
격 능력을 향상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다는 문제
의식 하에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다 정부가
당시 2022년 안에 개정 예정이라고 밝혔던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격
능력’을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2022년 12월 16일 기사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
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전략 관련 3문서(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발표했다. 기사다 총리는 공표 당일 기사

80/ 防衛省, 『防衛白書: 日本の防衛(令和3年版)』(東京: 日経印刷, 2021).

81/ 防衛省, 『防衛白書: 日本の防衛(令和4年版)』.

82/ 김남은, “일본이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 대북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p. 73.

83/ 위의 글, p. 73.

회견에서 이 3문서 개정을 통해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평가했다.^{84/} 그리고 ‘반격능력’은 상대국의 공격을 단념시키는 억제력을 의미하므로 향후 불가결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85/} 언론들도 보도기사에서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이 안보전략 관련 3문서들은 국내 안보체제 강화, 미일동맹 강화,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 강화 등 3가지 층위에 걸친 안보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시다 정부가 보다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내 안보체제 강화이다. 일본 방위정책의 기반이 되는 ‘방위계획대강’을 ‘국가방위전략’으로 교체하여 발간한 배경에도 전략적 관점 도입의 필요성, 독자적 방위력 강화, 미래전쟁 양상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86/} 기존의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이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을 중복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두 문서의 성격을 차별화하기 위한 맥락에서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안보 목표와 달성 전략에 집중하고, ‘국가방위전략’은 안보위협에 대한 방위전략을 명시하도록 했다.^{87/} 즉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방위전략과 육해공 자위대 통합방위전략을 제시하는 전략적 관점을 도입한 것이다. ‘국가방위전략’은 기존 육해공 영역에 더해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 등 관련 방위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통합 운용하는 ‘다차원 통합 방위력’을 계속 강화해 간다는 방침을 밝혔다.^{88/}

84/ 首相官邸, “岸田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22.12.16.,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2/1216kaiken.html> (검색일: 2023.11.1.).

85/ “岸田政権が閣議決定した安保関連3文書,” 『朝日新聞』, 2022.12.16.

86/ 조은일,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서 발간과 주요 쟁점,” 『국방논단』, 제1934호 (23-9) (2023.2), pp. 2~3.

87/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安全保障調査会, “新たな国家安全保障戦略等の策定に向けた提言: より深刻化する国際情勢下におけるわ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防衛力の抜本的強化の実現に向けて,” 2022.4.26., <https://storage2.jimin.jp/pdf/news/policy/203401_1.pdf> (검색일: 2023.11.1.).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일본에 대한 ‘핵심적인 도전국가’로 규정하는 동시에, 중국을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 국가로 지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안보환경 구축,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억지 및 대응능력 구축, 억지가 실패하여 침략이 발생할 경우 일본 주도의 대응과 동맹 지원을 통한 전쟁 종결 등, 세 가지 방위목표를 내세웠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독자적이고 견고한 방위체제 강화,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국가들과의 양자·다자협력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방위백서가 언급한 ‘반격능력’을 수용하면서, 일본에 대한 “탄도미사일에 의한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공격을 방어하기에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로서 상대에게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이 가능함” 자위대의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89/} 그러나 ‘반격능력’ 보유는 평화헌법 및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포함하며, 중장거리미사일 도입으로 역내 안보딜레마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또한 현재 일본이 운용하는 2단계 미사일방어체계(이지스함 장착의 SM-3 해상 요격미사일과 지상의 패트리엇 PAC-3)에 적의 공격 원점을 공격하는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90/}

‘방위력정비계획’은 육상자위대 내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 부대 강화, 통합항공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육상자위대 및 해상

88/ 防衛省, “国家防衛戦略について,” 2022.12.16., <<https://www.kantei.go.jp/jp/content/000119646.pdf>> (검색일: 2023.11.1.).

89/ 防衛省,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2022.12.16., <<https://www.cas.go.jp/jp/siryu/221216anzenhoshou/nss-j.pdf>> (검색일: 2023.11.1.).

90/ 今井和昌·藤井隆明, “新たな国家安全保障戦略を踏まえた防衛力の抜本的強化,” 『立法と調査』, 453 (2023), p. 88.

자위대 관련 부대 강화 등을 밝혔고, 안보정책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위예산은 향후 5년(2023~2027년)간 총 43조 엔(약 408조 원)으로 책정했다.^{91/} 이는 현재 수준의 1.5배 증액이며, 5년 이내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기시다 정부는 대만 유사 사태에 대비하여 오키나와(沖縄)현에 있는 육상자위대 작전부대를 여단에서 사단으로 격상하고, 육해공 자위대를 종합적으로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창설했으며, 항공자위대의 우주 영역 활동 확대에 따라 ‘항공우주자위대’로의 명칭 변경도 추진하는 등 자위대 재편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기시다 정부는 일본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GDP 2%에 달하는 예산 확보와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 및 보완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자위대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향상시켜 적의 무력공격 자체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을 방위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등 군사와 비군사, 평시와 비상사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한 사이버전, 정보전, 심리전, 대리전과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과 회색지대 갈등(gray zone conflict)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일본은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 양과 질을 모두 강화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기시다 정부가 내놓은 안보전략 관련 3문서는 이러한 일본의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92/}

첫째,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을 적시하며 일본이 “전후 가장 엄중

91/ 防衛省, “防衛力整備計画について,” 2022.12.16., <https://www.mod.go.jp/j/policy/agenda/guideline/plan/pdf/plan_outline.pdf> (검색일: 2023.11.1.).

92/ 박영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과 한반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포커스」, No. 2023-01, 2023.1.14., pp. 11~12.

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에 직면했다는 안보위협 인식이다. 기시다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동향,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전략적 판단 하에,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주장하고 안보전략 관련 3문서를 개정했다. 이는 기시다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형태의 방위력 구축 방향을 제시하면서 특정 국가를 가상 적국 및 위협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시다 총리는 적국의 전투 능력 및 방식과 현재 자위대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보다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해왔다.^{93/} 둘째, 일본의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미일동맹 강화는 물론, QUAD 국가들과의 협력,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의 NATO 소속 국가들을 포함한 소다자 안보 협력체와의 협력을 일본 안보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셋째, ‘반격능력’ 보유를 명문화했다. 상대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여 그동안 금기시되어 온 중거리미사일 전력을 자체 개발하거나 해외로부터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 외 상공으로부터의 위협에 일원적으로 대응하는 ‘통합방공미사일방어(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ce: IAMD)’ 구축도 새로운 목표로 포함했으며, ‘능동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 능력 보유와 우주 영역의 안보적 이용도 강조했다. 넷째, 안보정책 전환의 뒷받침이 되는 방위비를 향후 43조 엔, NATO 회원국과 유사한 수준인 GDP 대비 2% 수준까지 증액했다. 계획대로 방위비가 늘어난다면 일본은 2027년경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이 된다. 냉전 시기부터 견지해온 GDP 대비 1% 이내 방위비 제한의 비군사화 규범이 변경된 점은 큰 변화 요소이다.

탈냉전 이후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면서 점증적인 안보정책 변화

93/ 首相官邸, “岸田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22.12.16.

를 시도하기 시작한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일본의 방위정책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켜 자위대의 군비확장을 실현하고, 활동범위도 본토 방위에서 주변지역의 유사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추가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이버 공격, 통신 공격 등을 혼합한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자, 일본은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영해경비능력 강화, 기술 혁신에 따른 전쟁양상에 대응가능한 방위체제의 확립, 자원 확보 등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양적, 질적으로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즉 안보전략 3문서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수방위원칙에 따른 수동적이고 억제적인 방위 전략에서 벗어나 적의 위협에 선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위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94/}

^{94/} 최희식·이기태, “일본: 능동적 방위전략 전개와 영향력 확대,” p. 247.

IV. 기시다 정부의 협력외교

김남은(한림대학교 HK연구교수)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기시다 정부의 협력외교

1. 미일동맹 강화

기시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탈냉전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현재 국제질서는 역사적 변환점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의 지역 관여를 외교적·안보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0월 8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일본의 외교와 안보 정책의 기축은 미일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이 앞장서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인 미일동맹을 더욱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는 일본의 정책 방향이 전통적인 맹방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확대하면서, 동시에 여타 지역에 대한 외교 및 안보정책의 반경 확대를 통해 일본의 안보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95/}

아베 총리는 2012년부터 7년 9개월간 장기 집권하면서 국내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무기수출금지 3원칙의 변경, 국가안전

^{95/}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미일동맹 정책과 지구본 외교: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사이,” 『국방연구』, 제61권 3호 (2018), p. 184.

보장전략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안보기구의 변화, 안보 관련 법제의 제정과 개정 등 커다란 변화를 추진했다. 이러한 국내 안보체제의 변화는 미일동맹 강화에도 영향을 미쳐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반영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5년 4월 27일 미일 양국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미일동맹의 평시 협력과 주변사태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 요령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이드라인과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반영하여 ‘일본 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일본 자위의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이다.^{96/} 이외에도 미일 양국은 협의체제 구축과 작전계획 발전에 합의했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공동 대응의 범위를 확대했다. 즉 2015년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던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과 중국 억제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미일 양국은 다양한 공감대 속에서 동맹의 적용 범위와 수단을 확대해 왔으며, 이는 일본이 미국과 동등한 동맹으로서 지속적으로 미일동맹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정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기시다 정부가 출범한 지 약 4개월 만인 2022년 1월 7일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가 개최되었다.^{97/} 시기적으로 2021년 3월 16일 스가 정부 하에 개최된 후 약 10개월 만에 다시 양국 외교안보 고위당국자 간 회의가 개최된 것은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역내 안정을 위한 미일동맹의 중요성, 동맹 내 일본의 역할 확대, 그리고 대만해협 유사를 비롯하여 중국에 의해 제

96/ 김남은·서승원, “아베 정권의 안보위협 인식과 대응: 보통국가화의 촉진제로서의 위협인식,” 『일본학』, 제51집 (2020), p. 10.

97/ 外務省,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2+2」)共同発表,” 2022.1.7.,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284738.pdf>> (검색일: 2023.11.1.).

기되는 안보 우려 등 기존 미일 간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일본이 각각 양자 및 다자협력 기제를 통해 안보협력을 네트워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양자 및 한미일 3국 협력도 언급되었다. 이 회의에서 주목된 것은 동맹 전략을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완전히’ 일치시키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공동으로 설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역내 안보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함으로써 동맹의 결속력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는 향후 양국의 안보 관련 주요 문서에서 동맹의 비전과 우선 사항을 일체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와 기시다 정부가 내놓은 국가안보전략은 이러한 미일동맹의 비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10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한 주요 안보 문건들은 중국을 ‘탈냉전 시대 이후 세계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이자 ‘가장 결정적인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했으며, 기시다 정부가 12월에 발표한 안보전략 관련 주요 3문서들 또한 그것과 같은 인식 및 전략을 피력하고 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유럽과 미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일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대응에서 보여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에 특히 감사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일본의 강력한 대응은 러시아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해 맞선다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뜻을 전했다.^{98/}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이루어진 미일 정상

98/ “米大統領ウクライナ対応めぐり 岸田首相に謝意訪日の意向も,” *NHK*, 2022.3.1.,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301/k10013508671000.html> (검색일: 2023.11.1.).

회담은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 5월 23일 기사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양국 정상은 각각 아베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외무대신과 부통령으로서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던 만큼 친밀함을 과시했다. 정상회담 뒤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강화’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로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한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99/}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만해협 유사 사태, 그리고 동 사태가 동중국해 센카쿠 제도로 파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 유사시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100/} 정상회담에 앞서 5월 17일 오키나와 주둔 제3해병원정군(3MEF) 사령관 제임스 비어먼(James W. Bierman)은 기사 노부오(岸信夫) 방위대신을 예방한 자리에서 미일이 공동으로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101/} 이는 대만해협 유사 및 남서제도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연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바탕으로 핵위협 감

99/ 外務省, “日米首脳共同声明 「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の強化」,” 2022.5.23., <https://www.mofa.go.jp/mofaj/na/na1/us/shin4_000018.html> (검색일: 2023.11.1.).

100/ “バイデン氏, 台湾有事なら軍事的関与 日米共同会見,” 『日本経済新聞』, 2022.5.23.

101/ “日米首脳会談, 安保戦略改定見据え認識確認へ,” 『産経新聞』, 2022.5.22.

소를 위한 외교·안보 노력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미국 확장억제체제 강화와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 강화 등의 보완 노력도 재확인했다. 중국 핵군축과 핵위협 감소를 위해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러시아의 핵위협으로 인한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한다.^{102/} 또한 식량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및 질병과 같은 인간 안보에 공동으로 대비하고, 기시다 총리가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첨단과학기술 개발, 중산층 확대를 통해 새로이 대두되는 신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같은 날 일본 도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가 공식 출범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IPEF에 대한 지지였던 만큼 기시다 총리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외에도 G7, G20, WTO, OECD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경제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103/} 이처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다시 복귀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IPEF에 적극 참여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추동력을 높여준 것이며, 이는 곧 일본이 미국과 동등한 동맹으로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이다.^{104/}

102/ 두진호·조비연,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향.”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2-21, 2022.4.27.), pp. 1~9.

103/ 外務省, “インド太平洋経済枠組み(IPEF)の立上げに関する首脳級会合,” 2022.5.23., <https://www.mofa.go.jp/mofaj/na/na2/us/page3_003323.html> (검색일: 2023.11.1.).

2023년 1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정부가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2027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적 방위비 지출 증액과 새 국가안보전략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전폭적 지지를 보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105/} 또한 “미국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동맹에 대한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방어는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06/}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 자산을 모두 활용하여 일본 방위에 나설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일본의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기시다 총리는 “진짜(real) 리더이자 진짜 친구”라고 찬사를 보냈다.^{107/}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미국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한 뒤, “일본은 반격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방위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심”했으며, 또한 “일본의 이 정책은 동맹의 대응 및 억지 능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108/}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09/}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이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 북한, 러시아라

104/ 최은미, “새로운 질서 구축의 선봉에 서려는 일본,” (아산정책연구원 『2023 아산국제정세전망』, 2022.12.), p. 58.

105/ 장혜진,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의 평가 및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 안보정세분석』, 2022.1.19.), pp. 1~7.

106/ “바이든, 적기지 공격 능력 ‘전폭 지지’...일, 군사대국화 날개,” 『한겨레』, 2023.1.4.

107/ “바이든·기시다, 서로 이름 부르며 ‘진짜 친구’ ‘소중한 내 친구,’” 『연합뉴스』, 2023.1.14.

108/ “기시다 만난 바이든, 日 적기지 공격 능력 ‘지지,’” 『TV 조선뉴스』, 2023.1.14.

109/ 外務省, “日米共同声明,” 2023.1.17.

는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센카쿠 제도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따른 방어 대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는 미일 양국이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럽 지역에 대한 심각한 안보위협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납치문제의 즉각 해결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둘째, 평시의 동맹 태세,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 강화 등에 있어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다.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와 안보위협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일본은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며 전후의 탈각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미일동맹 역시 이에 상응하는 형태의 발전을 모색한 것이다. 이는, ‘반격능력’ 보유 등 일본의 공세적인 안보정책을 미국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미일동맹의 전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동맹의 지휘·통제 강화를 위해 일본이 창설한 상설통합사령부를 비롯해, 정보수집 및 공유체계 강화를 위한 미 공군 MQ-9의 전개, 미일공동정보 분석 조직의 설립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며,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통합항공미사일방어, 대수상전, 대잠수함전, 대기뢰전, 수륙양용작전, 공정작전, 정보·감시·정찰·타겟팅(Information, Surveillance, Reconnaissance, Targeting: ISRT), 병참수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동맹의 범위도 예년의 사이버 안보에서 우주 영역까지 확대했다. 이는 일본이 보유한 인공위성에 대한 공격에 미일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반도체, 에너지 안보,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핵심, 신흥 기술의 보호와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¹¹⁰⁾ 방위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도 강조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심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111/} 이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주일미군의 전방 전개 강화를 위한 부대 운용이 강조되었다. 즉, 2025년까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제12포병연대를 개편, 낙도를 거점으로 기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새 부대 해병연안연대(Marine Littoral Regiment: MLR)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전력 태세 최적화’가 언급된 것이 주목된다. 직접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한편 정상회담 이틀 전인 1월 11일,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양국 장관들은 중국의 대만이나 센카쿠 제도에 대한 행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오키나와에 배치한 미 해병대의 기동성을 강화하고 남서제도에서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는 데에도 합의했으며, 공동성명에는 동맹 파트너십 확대에 관해 미일호, 한미일, 미일-아세안, 미일-태평양도서국, QUAD, 미일-유럽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112/} 이 순서가 반드시 미일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은 미일호, 한미일 등 3자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틴(Lloyd Austin) 미 국방장관은 “이 새 부대는 첨단 정보·감시·정찰(ISR) 역량은 물론, 현재와 미래의 위

110/ “바이든, 적기지 공격 능력 ‘전폭지지’...일, 군사대국화 날개,” 『한겨레』, 2023.1.14.

111/ “바이든, 일본 반격능력 보유에 ‘역사적’...군사대국화 날개 커진 일본,” 『한겨레』, 2023.1.14.

112/ 外務省,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2+2)共同発表,” 2023.1.11.

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함 및 수송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 이동 거리에 적합한 신속 기동부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113/} 이 회의에서는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도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대응 대상이라고 선언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공동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일 양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상설통합사령부 창설, 주일미군의 부대 재편 등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미일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확대하기 위해 안보와 관련한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력 강화 및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에 우주까지 포함해 동맹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이와 함께 일본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와 지역 관여에 대한 의지를 동맹에 적극 투영시키고 있다. 자국의 방위를 넘어 미일동맹을 통해 국제사회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안보 네트워크 확대

‘가치외교’라는 기치 아래 일본 외교안보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호주, EU, NATO는 물론 인도 등의 신흥 민주주의 국가와 아세안 국가들도 포함된다. 아베 총리는 2007년 8월 22일 인도 의회에서 인도양과 태평양 ‘두 대양의 조화

^{113/} “주일美해병 ‘연안작전연대’ 임무는…유사시 신속기동군 전방,” 『연합뉴스』, 2023.1.24.

(Confluence of the Two Seas)’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자유와 번영의 호(弧)(Arc of Freedom and Prosperity)’를 처음 언급했다. 이 연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싹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114/}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두 바다가 교차하는 새롭게 ‘확대된 아시아’에서, 일본은 인도를 발견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와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두 해양국가 “일본과 인도는 국익에 가장 중요한 해로안전 확보 등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과 인도를 연결한 ‘확대된 아시아’는 “미국, 호주를 포함한 태평양 전체에 걸친 거대한 네트워크로 성장할 초석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을 뚫어나가는 자유와 번영의 반원을 구축하기 위해 대륙 전체에 걸쳐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15/} 이 연설의 내용은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연대를 기반으로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인도를 잇는 ‘확대된 아시아’를 구축하고, 이 큰 선으로 중국을 압박,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116/} 이 해양세력의 결집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치의 수호라는 보편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당시 아소 다로 외무대신은 보편적 가치에 대해 “풍요롭고 안정된 사회 형성”의 기초라고 정의했다.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근대화하고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백 년 이상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일본이 국제 연대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7/} 따

114/ 이정훈, “일본의 인도태평양 분석,” 『동서연구』, 제30권 4호 (2018), p. 85.

115/ 外務省, “二つの海の交わり(Confluence of the Two Seas),” 2007.8.22., <https://www.mofa.go.jp/mofaj/press/enzetsu/19/eabe_0822.html> (검색일: 2023.11.1.).

116/ 김남은, “21세기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 중국위협에 대한 전략과 지역구상,” p. 137.

라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제휴와 협력을 강조하며 “가치외교 실천은 선진국 일본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보편적 가치를 지역에 접목하여 새로운 지역의 경계와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2007년부터 현재 QUAD의 기원인 새로운 지역 협력체로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의 파트너십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외교’는 ‘자유와 번영의 호’에서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를 거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등의 이름으로 명명되며 발전해 왔으나, 그 근처에 흐르는 전략적 목표는 변함이 없다.^{118/}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일본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119/} 이러한 전략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미국은 물론, 특히 호주와 인도는 지속적으로 일본과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를 공유하는 협력이 필요한 국가로 정의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중국 위협을 배경으로 호주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일본은 호주 및 인도와의 양자 또는 미국 등과의 다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일본 외교에서 호주와 인도의 중요성은 일본이 미국 외에 안전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유일한 두 국가가 호주와 인도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은 양국 모두와 각각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방위장비 및 기술이

117/ 外務省, “自由と繁栄の弧をつくる,” 2006.11.30., <https://www.mofa.go.jp/mofaj/press/enzetsu/18/easo_1130.html> (검색일: 2023.11.1.).

11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일본정세 2022』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2023), p. 45.

119/ 위의 책, p. 45.

전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는 양국의 군사 조직 간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고 합동훈련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와는 ‘특별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Special Strategic and Global Partnership)’을 통해 정치, 경제, 안보, 글로벌 과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2년 10월 22일 기시다 총리는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후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신 일본-호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신 공동선언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의 주권이나 지역 안정에 영향을 주는 긴급 사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대응 조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120/}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훈련 실시와 시설의 상호이용 등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선언에서 “앞으로 10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본과 호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공동선언은 2007년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일호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이다. 기존 선언에는 테러 대책과 미국과 일본, 호주 3개국 협력 강화, 북한 핵·미사일 대응 협력 등이 포함됐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시다 정부가 처음으로 긴급사태 대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준동맹’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2022년 1월에는 양국의 부대가 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때 무기를 반입하는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일호 원활화협정(RAA)’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인도태평양 전략

^{120/} “일본, ‘준동맹국’ 호주와 신안보선언…긴급사태시 중국 공동대응,” 『연합뉴스』, 2022.10.22.

의 기치 아래 양국의 방문 및 협력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양국의 안보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121/}

기시다 정부는 이러한 양자외교를 강화하면서도 다자외교에 중점을 두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러의 전략적 연대, 유럽의 안보까지 고려하면서 일본 외교정책의 지역적 범위와 사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음을 의미한다.^{122/} 또한 중러 관계가 서로의 핵심 이익을 지지하는 수준으로 긴밀해지자, 일본은 이와 같은 중국의 대응을 러시아의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판단을 토대로 일본은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안보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22년 5월 23일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날 QUAD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5월 24일 QUAD 정상회담은 이 회담의 목적이 자유, 국제법에 의한 질서유지, 민주주의의 가치 보존, 주권과 영토 보호, 무력 없는 평화적 분쟁해결,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COVID-19와 글로벌 공공보건 안보, 사회기반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 안보, 핵심기술 협력, 젊은 지도자 양성, 우주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1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이 개최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협력자로서 일본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2022년 6월 29일~30일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NATO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참여한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 문제와 중국 문제가 불가분

121/ 김지영,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하의 ‘한국 패싱’론 분석,” 『일본학보』, 제132권 (2022), p. 33.

122/ 윤석정, “우크라이나 전쟁과 일본의 대외 정책,” p. 9.

의 관계임을 역설했으며, 나토와 일본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호언했다. 정상회담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일본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의 불가분성을 내세우며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2022년 12월 1일에는 17차 일-나토 고위급 실무협회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에서는 일본과 나토의 안보정책, 일-나토 협력,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3년 1월 31일에는 일-나토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나토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23/} 일본은 개별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방위장비 및 기술이전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이어 2023년 1월 원화협정(RAA)을 체결했다. 또한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2035년을 목표로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투기 공동개발은 전후 일본이 주요 방위 장비 분야에서 처음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2023년 5월 19일~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호주,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지도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청되었다.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해 연합전선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한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이 회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서방의 ‘역사적 단결’을 과시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 개막 하루

^{123/} 위의 책, p. 11.

전인 5월 18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평가하며, 미일관계는 안보 분야에 머물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진전이 이루어져 중층적이고 강고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124/}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는 독일을 제외한 참여국들을 모두 방문하는 등 적극적 외교를 펼쳐왔으며, 2023년 1월 13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로 순방을 시작한 후 이루어진 것이었다. G7 정상회의에서 7개국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변함없는 지지와 공동의 대중국 접근방식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 전쟁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과 대만해협 문제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125/}

한편 기시다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아세안의 베트남이었을 정도로 기시다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등과의 해상안보 협력에 적극적이다.^{126/} 기시다 총리는 2022년 5월 베트남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베트남군 사이버 안보능력 구축 지원 및 해상안보능력 향상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2022년 4월에는 필리핀과 외교·국방 장관 회담인 2+2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고 군사훈련 강화, 군수품 상호제공 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6월에는 싱가포르와 방위장비 및 기술이전 협정 교섭을 개시했다. 2023년 9월 6일에는 일본과 아세안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양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

124/ “기시다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의 초석’,” 『연합뉴스』, 2023.5.18.

125/ “2023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평가 및 시사점,” 『시사 TIMES』, 2023.9.1.

126/ 이기태, “일본의 대베트남 안보협력: 소프트 안보협력,” 『일본학보』, 제122집 (2020), pp. 115~147.

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교통 인프라 정비, 디지털 연결, 해양 협력, 공급망 강화, 전력 연결, 사람과 지식의 연결 등에 대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3. 한미일 3국 협력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한미일 협력과 한일관계 재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한미일 3국 협력체제를 재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기도 했다.^{127/} 2022년 5월 11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일 간 대치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한일정책협의단(4.24.~4.28.)을 파견하였고,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대신의 방한(5.9.~5.10.)에 이어 박진 외교부장관의 방일(7.18.~7.20.)이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고위급 협의도 활발해졌다.^{128/}

특히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3국 협력을 통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후 6개월 만인 2023년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

127/ 최희식,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한일관계: 양극화된 정치와 대일정책,” 『일본연구논총』, 제56권 (2022), p. 132.

128/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국제정세 전망 2023: 복합경쟁(Complex Competition)』,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2), p. 59.

회의장에 모인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동맹 전선을 구축하고 대북억제력 강화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3국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129/}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만나기 전, 2023년 3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2023년 5월 6~7일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졌다. 약 두 달 사이 두 번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양국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었고,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및 수출규제 갈등 봉합 등에도 합의하며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담았으며 외교안보당국 간 안보대화, NSC 간 경제안보대화, 재무장관회의 본격 가동, 미래세대의 교류, 반도체 공급망 공조,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 등도 포함되었다. 공동성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도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해 양국 교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130/}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단순한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 차원이 아니라 일본 대외전략 추진과 관련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12월 28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한 차원 발전시킬 의도를 드러냈다. 보고서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

129/ “한·미·일 정상, “3국 간 전략적 공조 강화…새로운 수준으로 발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5.21.

130/ “[한일 정상회담] 셔틀외교·지소미아 복원…尹, 첫 방일 마치고 귀국길,” 『연합뉴스』, 2023.3.17.

한미호 3자 협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며,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쿼드와의 협력 확대도 언급했다.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 간에 전략적 이익이 수렴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31/} 더불어, 북한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위협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양자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인 8월 18일, 바이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을 넘어 ‘공동의 위협’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132/} 공동성명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으로, 지침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으로 각각 이름 붙였다. 3국 간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하는 ‘협의 공약’도 채택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간 협력체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33/} 미국은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안보협력 수준을 ‘준군사동맹’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3개 문건에서 확인되는 한미일 협력체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역내 소다자 안보협의체인 QUAD나 AUKUS와 견주어도 위상이 강력하다.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미일 협력이 QUAD나 AUKUS 등을 능가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일은 역내 안보 위기 발생 시 상호 소통하여 대응 조치한다는 ‘협약에 대한 공약’을 채택하면서, 유사 사태 시 군사적 공동 대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134/} 또한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

13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국제정세전망』, p. 73.

132/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 『동아일보』, 2023.8.19.

133/ “쿼드·오커스보다 넓고 깊게…중국 ‘포위하는’ 미국,” 『경향신문』, 2023.8.20.

134/ 위의 자료.

하기로 했으며 국가안보실장, 외교·국방·산업장관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개최하기로 했다.^{135/} 각 분야 및 각급의 소통 채널을 정례적으로 가동하여 다층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조직화한 것이 QUAD나 AUKUS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136/}

135/ 위의 자료.

136/ 위의 자료.

V. 기시다 정부의 위협대응 외교

현승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기시다 정부의 위협대응 외교

1. 기시다 정부의 대 중국 전략

가. 일본 외교에서 대 중국 관계

(1) 일중 관계의 위기

2022년은 일본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주년을 맞는 해였다.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과 상호 연계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경제 중심의 일중 협력은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이 미국과 견줄 정도의 경제력을 키워 G2로 부상했고, 이를 토대로 군사적 확장을 도모해 미국과 일본의 경계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을 탈냉전 세계질서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 국가로 본다.

국교 정상화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일중 관계에 위기가 초래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무렵부터였다.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2002~2006년 재위)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했고 양국 관계가 악화 조짐을 보였다. 2006년 9월 총리직에 오른 아베 신조는 집권 초기에 일중 관

(2) 일중 관계 장애 요인

오늘날 일중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은 역사 인식, 영토 갈등, 타이완 문제 그리고 미일 동맹 등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사 인식이다. 20세기 초 일본의 중국 침략을 둘러싸고 일중 사이에 역사 인식의 간극이 존재한다. 국가 간 또는 민족 간에 존재하는 역사 인식의 간극은 좁처럼 메우기가 쉽지 않다. 정부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도 어렵다. 역사 인식을 둘러싼 일중 갈등은 한일 역사 갈등과도 닮아있다. 침략 사실과 전쟁 범죄를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일본 내 역사수정주의 움직임, 일본 교과서의 역사 기술 문제, 일본 관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해 왔다. 여기에 역사 문제가 양국 국내 정치와 연결되어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둘째, 영토 갈등이다. 중국 측은 센카쿠와 주변 해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측과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139/} 특히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사유지였던 센카쿠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갈등은 분쟁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140/}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증가했고 일

^{139/} 일본은 센카쿠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센카쿠 영유권에 대한 갈등을 영토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어업 활동이 증가했다. 2008년 12월에는 중국 공선이 처음으로 일본 영해를 9시간에 걸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5월 일본을 공식 방문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악화된 양국 관계의 재구축을 표명한 직후여서 중국 공선의 일본 영해 침입 사건이 일본 사회에 미친 파장은 컸다. 2010년에는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과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江藤名保子, “日中關係の再考—競合を前提とした協調戦略の展開—,”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 『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 令和元年 第3号(通巻 第138号, 2019.8.), p. 106., <https://www.mof.go.jp/pri/publication/financial_review/fr_list7/r138/r138_07.pdf> (검색일: 2023.4.29.).

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초래했다. 2018년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일중 양국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기도 했지만 영유권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으며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현재 센카쿠 문제는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다.

동중국해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다. 2004년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과 중국의 경계 해역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141/} 일본이 동중국해 문제를 자국 안보와 연계해 중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은 2012년 아베 총리의 집권 2기가 시작되고부터였다. 2013년 9월 아베 총리는 중국의 군사비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고,^{142/} 같은 해 11월에는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 설정했다면서 공식적으로 항의했다.^{143/} 중국은 대륙붕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을 주장하는 데 반해, 일본은 일중 중간선에 근거한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일중 모두 자국 영토를 늘리기 위한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어 타협은 요원하다.

셋째는 타이완 문제이다.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이자 핵심 이익으

140/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에 항의해 중국 내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잇따랐으며, 중국 정부는 양국 정상 상호 방문을 포함한 모든 교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江藤名保子, “日中関係の再考—競合を前提とした協調戦略の展開—,” p. 106. 2012년 11월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센카쿠와 연계한 대일 압박을 한층 강화하면서도, 이 문제를 ‘보류’하고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타협하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1/ “中国、ガス田開発着々日本は中止求める,” 『日本経済新聞』, 2015.7.23., <<https://www.nikkei.com/article/DGXZZO76056900T20C14A8000048/>> (검색일: 2023.4.12.).

142/ “「軍国主義者と呼びたいならどうぞ」…米国で安倍首相が大胆な発言,” 『中央日報』, 2013.9.27., <<https://s.japanese.joins.com/JArticle/176532?sectcode=A00&servcode=A00>> (검색일: 2023.4.29.).

143/ “首相「一切の措置撤回を」中国の防空識別圏設定,” 『日本経済新聞』, 2013.11.25.,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S2503T_V21C13A1EA2000/> (검색일: 2023.5.1.).

로 천명한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타이완과 우호 관계를 넘어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상황을 용인하기는 힘들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며 타이완의 독립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과 타이완의 우호 관계는 1972년 9월 단교 조치 이후에도 면면히 이어져 왔으며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타이완과 수십 개의 경제 협력 및 무역 관련 협정을 체결했고, 특히 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총통 집권기(2016년 5월~현재)에 양자 간 고위급 인적 교류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타이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3개 주요 국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면은 2021년 3월 미국과 일본 사이에 국방·외교 장관급 회담(2+2)이 개최된 시점이다. 당시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회담 성과를 평가하면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144/} 두 번째 국면은 일본이 타이완에 코로나 백신을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한 사건이다. 일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잉원 정부를 도운 셈이다. 백신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차이 정권에 쏟아지던 타이완 내부의 비난을 잠재우고, 동시에 중국산 백신 도입을 막으려는 차이 정부의 의중을 파악해 이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국면은 2021년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방위백서』에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가 감지된 사실이다. 『방위백서』에 타이완의 안전이 일본 안보에 중요하다는 문장이 등장한 것은 2021년판이 처음이었다.^{145/} 또한 기존 백서에는 타이완에 관한 언급이 중국에 관해 기술한 장 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21년판에

144/ 外務省,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會(「2+2」)共同記者会見,” 2021.3.16., <https://www.mofa.go.jp/mofaj/na/st/page3_003036.html> (검색일: 2023.4.29.).

145/ “「台湾情勢の安定重要」防衛白書に初明記,” 『日本経済新聞』, 2021.7.13.,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93K00Z00C21A7000000/>> (검색일: 2023.4.29.).

는 미국과 중국 관계를 다룬 새로운 장 안에 등장한 점도 주목할 만했다.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일중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했음은 명백하다.

넷째는 미일 동맹과 관련된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경계감 고조, 트럼프 미 행정부 이후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패권 경쟁은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져, 일중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은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미국과 연대하는 쪽을 선택했고,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해 경제와 군사적 지원을 늘리고 있는 배경에도 이러한 중국 견제 전략이 깔려 있다. 일본은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쿼드(QUAD), 인도태평양 구상,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회랑(Asia Africa Growth Corridor: AAGC)과 같은 다양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 왔다.^{146/}

(3) 정랭경열(政冷經熱)의 일중 관계

하지만 일본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규모로 확장해 온 중국의 경제적 위상과 역할을 무시할 수 없고, 일중 경제 관계를 쉽게 축소 또는 단절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1972년 일본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할 당시 양국의 GDP는 중국이 1,136억 달러, 일본이 3,180억 달러로 격차가 컸다. 두 나라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기 시작한 계기는 1978년 10월 당시 중국 부총리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의 일본 방문이었다. 일본 기업인들과 면담하고 공장들을 시찰한 덩

^{146/}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회랑’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일본과 인도, 아프리카에서 전략적 개발 협력 추진,” Indo-Pacific Defense FORUM, 2018.4.3., <<https://ipdefenseforum.com/ko/2018/04/일본과-인도-아프리카에서-전략적-개발-협력-추진/>> (검색일: 2023.4.2.).

부총리는 귀국 두 달 후 ‘개혁·개방’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경제 도입을 천명했다. 이에 맞춰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도 활발해져, 1988년에는 일본의 대 중국 직접 투자가 5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 해에 중국의 GDP는 4,078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탈냉전 분위기가 세계를 휩쓸던 1989년 중국에서 발생한 천안문 사건으로 일중 경제 관계에 위기도 있었지만, 1991년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일본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일본의 대 중국 투자 열기는 다시 회복되었다. 그 결과 1997년 일본의 대 중국 직접 투자는 43억 달러를 기록해 천안문 사건 이전 시기에 비해 8배 가까이 늘었다.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달성한 중국은 이후에도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계속한다.^{147/}

중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양국 경제 관계도 심화됐다. 수출입을 합한 양국 무역 총액은 2000년 857억 달러였던 것이 2010년에는 3,018억 달러로 늘어 10년 새 3배나 확대되었다. 이 기간에 일본의 대 중국 무역액은 대미 무역액을 넘어섰으며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 상대국으로 발돋움했다. 2010년에는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했고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지위를 중국에 넘겨주게 된다. 이후 일본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성장을 지속해 일본과의 경제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는 동안 일본 경제의 중국 의존도도 높아져 갔다. 일본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업계를 보더라도 양상은 뚜렷하다. 2022년 일본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서 판매한 승용차 대수는 442만 대에 달해, 일본 국내 판

147/ “日中国交正常化50年 世界2位と3位の経済大国 経済関係の歩み,” NHK, 2022. 9.28.,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928/k10013839791000.html>> (검색일: 2023.4.2.).

매 대수와 거의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관광 분야에서도 중국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959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했다.^{148/}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연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양국 간 정치·안보적 연계는 점차 악화하는 쪽으로 흘렀다. 이를 두고 양국 전문가들은 일중 관계를 ‘정랭경열(政冷經熱)’의 관계로 부른다. 정치 관계는 냉각되었지만 경제 관계는 뜨겁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성장세 둔화로 일본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축소되고 있어 향후 일중 경제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50년 동안 구축돼 온 일중 사이의 공급망이 짧은 시간 안에 해체되기는 어려우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 시장의 중요성도 당장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정랭경열의 일중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나. 기시다 정부의 대 중국 전략

(1) 기시다 총리의 대 중국 인식

기시다 정부의 대 중국 외교 노선은 이전 정부인 아베 총리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 흐름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은 한층 더 강경해진 것처럼 보인다. 기시다 정부가 선택한 미일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중심의 외교 노선이 일본의 대 중국 견제 의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48/} “日中国交正常化50年 世界2位と3位の経済大国 経済関係の歩み,” NHK, 2022, 9, 28.

기시다 총리 개인의 대 중국 인식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그가 총리직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기시다 비전』에는 특별히 일본이 직면한 외교·안보 현안으로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한다. 일본은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위치하며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을 피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일본이 자주·자립을 유지하고 국제사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하여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다.^{149/}

기시다의 부정적인 대 중국 인식은 그의 저서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다.

실제로, 우리 이웃국가 중에는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21세기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존중, 법의 지배가 반드시 관철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공산당 일당독재를 내걸었다고 해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존중, 법의 지배 같은 인류 공통의 이념을 정면에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회의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국의 고위 관료는 얼굴을 찌푸리겠지만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고까지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150/}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일방적, 도발적 그리고 팽창적인 행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센카쿠 제도 주변에서도 중국 공선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중국의 공군기가 빈번하게 영공에 접근하기도 합니다.^{151/}

『기시다 비전』에서 그의 부정적인 대 중국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149/ 岸田文雄, 『岸田ビジョン 分断から強調へ』(東京: 講談社, 2021), p. 52.

150/ 위의 책, p. 67.

151/ 위의 책, p. 70.

주는 부분은 ‘중국과 핵’이라는 제목이 달린 장이다. 기시다는 미래 핵 경쟁과 이란, 북한의 핵 개발 의혹 등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 군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핵 군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로 중국을 꼽는다. 중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도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군비 증강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2010년 일본과 호주 정부가 주도해 설립한 ‘NPDI(군축·비확산이니셔티브)’가 핵 보유국들을 상대로 현재 보유중인 핵탄두 수를 공개하도록 요청했을 때,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영국, 프랑스도 어느 정도 성실한 답변을 보내온 데 반해, 중국은 단 한 번도 답신을 보내온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핵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기시다 총리 자신이 발의해 만든 ‘국제현인(賢人)회의’에도 중국은 참가하지 않았다면서 세계의 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이 핵 분야에서도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152/}

이와 동시에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체제경쟁국으로서 의식하고 있음도 내비친다. 공공사업이나 교육, 과학 기술 관련 예산이 날로 줄어드는 일본에 비해,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실현을 위해 막대한 인프라 예산을 책정하고 AI, 5G 같은 첨단 기술 개발에 전례 없는 규모로 국비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153/}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국가가 주도해 강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는 없다고 아쉬워한다.^{154/} 이 밖에도 『네이처』 같은 국제 저명 과학 잡지에 게재된 주요국의 논문 수를 보면 중국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 등이 주목을 끈다.^{155/}

152/ 위의 책, pp. 57~58.

153/ 위의 책, p. 23.

154/ 위의 책, p. 23.

(2) 기시다의 일중 관계 관리

기시다 총리는 내각 출범 직후인 2021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 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에 기초한 세 개의 원칙을 관철해 나가자는 데에 합의했다. 그 원칙은 첫째, 주장할 것은 주장한다. 둘째, 상대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셋째, 일중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한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세 번째 원칙과 관련해 일중 정상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공통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첫째, 일중은 서로 협력 파트너이며, 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공통 인식을 실천한다. 둘째, 일중 고위급 경제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건강 및 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일중 고위급 인적 및 문화적 교류 대화 회의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한다. 넷째, 국방 당국 간 해공(海空) 연락 메커니즘 및 핫라인을 빠른 시일 안에 개설하고, 방위 및 해양 관련 당국 간의 대화와 의사소통을 강화한다. 다섯째,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고, 전지구적 과제에 대처한다.^{156/}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위에서 언급한 원칙들에 입각해 정상 및 각료 레벨에서 중국 측과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협력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간다면, 일중 사이에 극적인 관계 개선은 어렵겠지만 결정적인 대립이나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신문은 미중 또는 일중 간에

155/ 위의 책, p. 24.

156/ “日中關係をどう「管理」するか,”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2.12.13., <<https://www.yomiuri.co.jp/column/henshu/20221209-OYT8T50022/2/>> (검색일: 2023.7.9.).

정상회담이 수개월 단위로 계속 이어진다면 중국이 돌발적으로 타이완을 무력 통일하려 시도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지지 않겠느냐면서 이것이 바로 일중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57/}

『요미우리』 신문이 전망하고 제안한 것처럼,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일본의 대 중국 정책은 이전 정부인 아베 정부의 그것과 큰 차이 없이, 무난하게 ‘관리’되는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기시다 정부는 일중 관계 악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뿐, 대 중국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기시다 총리 개인의 대 중국 인식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변화는 기시다 정부의 대중 정책을 아베 총리 집권기 이상으로 경직되게 만들었다.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 탓도 있지만 일본이 3년 3개월 동안 일중 외교장관 회담에 응하지 않은 점, 퇴임하는 주일중국대사의 면담 요청을 기시다 총리가 거부한 점 등은 기시다 집권기에 더욱 험악해진 일중 관계를 상징하는 사건들이다. 여기에 2022년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일중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린 미국에 대한 맞대응으로 타이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158/}

일본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는 2022년 11월 17일 성사된 일중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일중 두 나라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가진 것은 아베 전 총리 집권 당시인 2019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159/} 코로나의 전세계 확산

157/ “日中關係をどう「管理」するか.”

15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일본정세 2022』, p. 28.

159/ 기시다 총리 집권 이후 대면으로 이루어진 첫 일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것이며, 약 40분간 진행되었다.

으로 인해 중단된 양국 정상 간 직접 대면이 3년 만에 재개된 셈이다.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중 양국이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발언으로 회담을 시작했다. 그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도 여기에 동의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에는 폭넓은 공통 이익과 협력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운을 댄 후, 기시다 총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관계를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중국 방문 계획이 논의 되었다.

민감한 타이완 문제도 회담 내용에 포함되었다. 기시다 총리는 타이완 주변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타이완 해협과 평화와 안정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와 동시에 안보 분야에서 일중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 측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빠른 시일 안에 풀어주도록 시 주석에게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서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는 러시아의 행동에 기시다 총리가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양국 정상은 핵무기 사용과 핵전쟁 가능성을 차단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포함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일본 언론과 정계 및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이번 첫 대면 정상회담이 많은 난제를 미해결인 채로 남겨두기는 했지만, 좋은 출

발점이라는 것이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公明黨)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공명당 참의원의원 총회에서 “3년만에 대면으로 회담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며,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서로의 주장이 부딪히는 일도 당연히 있겠지만, 협력할 수 있는 과제도 있다. 서로 오랜 역사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관계를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논평했다.^{160/} 공명당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 외무상으로서 3년 3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한 하야시 외무상은 2023년 4월 2일 일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이 조속히 전화 회담을 하자는 기시다 총리의 뜻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기시다 정부가 지향하는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일본 정부가 내린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중국에 구속된 일본인 남성을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하다는 일본 측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161/}

사실 기시다 총리는 대 중국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가지 않도록 ‘주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종종 피력해 왔다. 앞 절에서 인용한 『기시다 비전』에서 그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의대수(一衣帶水)와 같은 이웃나라

160/ “日中首脳会談 関係改善へ緊密な意思疎通で一致も 具体化が課題,” *NHK*, 2022. 11.18., <<https://www3.nhk.or.jp/news/html/20221118/k10013895561000.html>> (검색일: 2023.8.29.).

161/ 加藤嘉一, “中国が「林外相の訪中」を受け入れた思惑とは? “3つの観点”で読み解く,” *DIAMOND online*, 2023.4.4., <<https://diamond.jp/articles/-/320638>> (검색일: 2023.8.29.). 2023년 3월 베이징에서 일본의 대형 제약 기업인 ‘아스 테라스’사의 남자 직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다.

로서 독자적인 대 중국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162/}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도 제시한다.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RCEP(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계)이나 TPP(환태평양파트너십) 협정과 같은 틀을 주도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하는 큰 원을 만들고, 훗날 여기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163/}

그는 2023년 5월 22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면서 일중 관계와 관련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쌓아나갔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 대화와 정상회담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대단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내용으로 해석된다.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참석한 서방 국가 정상들이 중국과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에 직접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항의했다.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아직 회담이 언제 열릴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앞으로도 할 말은 할 것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것은 하겠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해 나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64/}

162/ 岸田文雄, 『岸田ビジョン 分断から強調へ』, p. 74.

163/ 위의 책, p. 75.

164/ “安定的な日中関係は双方の努力で、首脳会談など検討=岸田首相,” *REUTERS*, 2023.7.31., <<https://jp.reuters.com/article/kishida-china-idJPKBN2XD0IK>> (검색일: 2023.8.11.).

일본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볼 때, 일중 관계가 조만간 획기적인 수준에서 개선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2023년 7월 28일에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방위백서』에서도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백서 내 각국의 군사 정세를 분석하는 장에서도 중국의 동향 보고에 31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어 타국을 압도한다. 백서는 아울러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 균형이 “전체적으로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경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2022년 8월과 2023년 4월에 타이완 주변에서 실시한 대규모 군사 연습은 침공 작전의 일부를 상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다.^{165/}

중국 정부는 2023년판 『방위백서』가 발표된 다음날인 7월 29일 국방부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일본의 대 중국 인식이 잘못되었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다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한편, 일본 측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하고 백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이 계속해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 관계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중 관계의 기초를 해치고 타이완 해협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은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정세는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도 일부 나라들이 “이기심에 못이겨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군함이나 항공기를 빈번하게 출동시키는 바람에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166/} 일본

165/ “防衛白書, 中国への言及最多「国際社会の深刻な懸念」警戒感あらわ,” 『朝日新聞 DIGITAL』, 2023.7.28.,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R7X5JBJR7XULFA00L.html>> (검색일: 2023.8.11.).

166/ “中国国防省, 日本の防衛白書を批判「軍事的脅威」意図的に誇張,” *REUTERS*, 2023.5.22., <<https://jp.reuters.com/article/china-military-japan-idJPKBN2ZB03T>> (검색일: 2023.8.11.).

과 함께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3) 일중 디커플링의 한계와 전망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내부에서도 지나친 대중 견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무엇보다 일본 경제가 중국과 ‘디커플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2023년 7월에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일중 무역 총액은 438조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2023년에도 중국은 여전히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167/} 중국에게 있어서도 일본은 미국과 한국에 이은 세 번째 무역 상대국이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인 이이노 미쓰히로(飯野光浩)는 일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도 일본의 대외무역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과 중국 대외 무역 전체에서 일본의 비율이 모두 20~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부터, 일본의 대 중국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1년 (전체 교역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보다도 높다.^{168/}

이이노는 일단 무역 패턴과 공급망이 확립되면 이것을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무역 패턴과 공급망을 지탱하는 경제적 요인은 정치적인 계산과는 별도로 기능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일

167/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07735.pdf>> (검색일: 2023.9.4.). 일본의 수출입 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에 달한다.

168/ 飯野光浩, “日中經濟のデカップリングについて考える,” 『世界經濟評論IMPACT』, 2022.10.24., <<http://www.world-economic-review.jp/impact/article2719.html>> (검색일: 2023.9.4.).

중 경제 관계의 디커플링은 실현 불가능하며 경제적인 요인을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경제 관계를 구축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한다.^{169/}

이런 가운데 일중 관계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거리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가 결정하고 시행한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고,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와 도쿄 등 10개 지역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다.^{170/} 그러나 일본이 핵처리수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 24일부터 수입 금지 지역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171/}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 정부도 일본 10개 지역의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172/}

일본 정부는 이번 처리수 방류 결정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173/} 또 중국 국민 사이에 확산하는 반일 감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에 항의하는 한편, 중국이 수입 규제를 철폐

169/ 飯野光浩, “日中經濟のデカップリングについて考える.”

170/ “중국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MBC뉴스』, 2023.8.24.

171/ 위의 자료.

172/ 일본 농림수산업성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이 홍콩에 수출한 수산물은 7,550억 원 규모로, 중국 본토(8,710억 원)에 이어 일본 수산물 수출국 2위를 차지했다.

173/ EU는 지금까지 일본이 기울여 온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국내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 주도록 요청했다. IAEA 또한 앞으로 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EU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부과하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한국과 타이완도 국민들 사이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IAEA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수산물 섭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기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금수 조치가 일본 수산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174/} 일본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는 수산물의 공급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175/}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대 중국 수출은 자동차와 기계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산물 수출 감소가 일본 경제 전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176/} 하지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경제 문제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며, 얽히고설킨 일중 간 정치·외교 관계를 투영하고 있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시다 정부의 대 러시아 전략

가. 일본 외교에서 대 러시아 관계

(1) 아베의 대 러시아 접근

아베 전 총리의 외교 정책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적극적인 대 러시아 접근이었다. 아베는 러시아와의 사이에 오랜 숙제로 남아 있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른바 북방영토(러시아명 남쿠릴열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북방영토는 일본이 지배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소련에게 영유권을 ‘빼앗겼다’고

174/ 2022년 일본 수산물 수출 총액 가운데 중국 본토와 홍콩에 대한 비중이 각각 22.5%와 19.5%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수산물 수출의 42%에 달하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다.

175/ “日, 중국발 오염수 후폭풍에 수백억엔 추가 투입,” 『서울경제』, 2023.8.31.

176/ “후쿠시마 오염수: 중국,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67% 급감,” 『BBC NEWS 코리아』, 2023.9.21.,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glexpy48rko>> (검색일: 2023.9.23.).

주장하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4개 섬을 가리킨다.^{177/} 1956년 일본과 소련은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일소 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4개 섬 중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일본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자 이에 반발한 소련은 평화조약 체결과 영토 반환 교섭을 거부했고, 1992년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 역시 일본과의 영토 반환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아베 총리의 대러 관계 강화 정책은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하나는 일러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베는 러시아에서 높은 지지율 아래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의지와 결정이 영토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개인적 친분을 쌓는 데 주력했다. 아베는 2차 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부터 7년 8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과 24회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베 1차 내각 당시를 포함하면 정상회담 횟수는 27회에 달한다.^{178/}

또 하나의 방향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러시아로부터 전략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그 단적인 사례는 일본이 러시아에 제안한 ‘일러 경제협력 8개 항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16년 5월 러시아를 방문한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 회담 당시 제안한 양국 경제 협력 구상으로, 아베 집권기 동안 일본 정부의 대러 경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① 건강수명의 증진 ② 쾌적하고 청결하며 살기 좋고 활동하기 편한 도시 만들

177/ 4개 섬은 구나시리(러시아명 쿠나시르), 에토로후(이투루프), 시코탄(러시아명 동일), 하보마이(러시아명 동일)이며, 이 가운데 하보마이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이나 관례상 묶어서 부른다.

178/ 外務省, “ロシア連邦 過去の要人往来・会談,” 2022.9.27., <<https://www.mofa.go.jp/mofaj/area/russia/visit/index.html>> (검색일: 2023.5.23.).

기 ③ 중소기업 교류 및 협력의 근본적 확대 ④ 에너지 ⑤ 러시아의 산업 다양화 및 생산성 증대 ⑥ 극동 지방의 산업 진흥 및 수출 기지화 ⑦ 첨단기술 협력 ⑧ 인적 교류의 근본적 확대이다. 아베 총리는 2019년 9월에도 러시아 극동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 앞에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이며 8개 항목에 ‘디지털 경제’를 추가하기도 했다.^{179/}

아베 총리가 대러 관계 개선을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파도할 정도로 대러 밀착 행보를 보인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자신이 일본 외교의 핵심 과제를 타결하고 ‘전후 체제’를 마무리 지은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이자 외무상을 역임했던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가 1982~1986년의 재임 기간 동안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사실도, 아베 총리 개인의 유산적 사명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180/}

또 하나는 대미 견제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상호 밀착해 들어가던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이격시키려는 목적에서다. 일본은 미중 경쟁이 가속화 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전략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일본의 외교와 안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을 보전하기 위해 양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었다. 미중, 미러 관계가 험악해질수록 중러 밀착은 더욱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많은 전문

179/ “安倍・プーチン時代の日露経済関係を振り返る,” 『The Asahi Shimbun Globe+』, 2020.9.15., <<https://globe.asahi.com/article/13726266>> (검색일: 2023.5.23.).

180/ 東郷和彦, “日本の外交戦略: 北朝鮮・中国・ロシア、そして長期的ビジョン,” 『平和政策研究所』, 2018.4.9., <<https://ippjapan.org/archives/2664>> (검색일: 2023.6.1.).

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준군사동맹 단계까지 관계를 격상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중국의 판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강화되고 여기에 러시아가 가세할 경우, 일본의 전략적 이익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러시아를 중국과 이격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다.^{181/}

아베 총리는 성장하는 아태 지역 경제에 편입하기를 원하는 러시아가 일본으로부터 경제와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계산했다. 일본으로서도 일러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경우 러시아와의 국경에 투사하던 군사력을 중국과의 접경지대인 서남쪽으로 이동시켜 중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에 올곧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해양 확대 저지와 대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베의 셈법이였다.

(2) 대러 교섭의 좌절

그러나 아베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교섭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연례적인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전제조건 없이 올해 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182/} 그 해 10월, 러시아 대통령실 산하 조직이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발다이 디스커션 클럽 연차 총회’에서 푸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중국과는 2001년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함

181/ “「中露が手を組む事態だけは避けねば」安倍首相が目指す日露新時代とは,” 『産経新聞』, 2019.1.23., <<https://www.sankei.com/article/20190123-SW72VPRMOJNULCOXYF463W2QPI/>> (검색일: 2023.6.1.).

182/ “푸틴-아베, 다음주 싱가포르서 정상회담... “쿠릴열도 공동개발 논의”, 『VOA 한국어』, 2018.11.9., <<https://www.voakorea.com/a/4651394.html>> (검색일: 2023.6.1.).

으로써 양국 간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2004년에 영토 문제를 해결했다. 일본과도 우선 같은 성격의 조약을 체결하고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었다.^{183/}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아베 총리는 2018년 11월 푸틴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만나 회담했다. 여기서 양국 정상은 평화조약 체결 후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일본에 반환한다는 1996년 일소 공동 선언에 기초해 평화조약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그때까지 북방영토 4개 섬 반환을 요구해 오던 일본 정부의 방침이 2개 섬 반환으로 바뀐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184/} 4개 섬 일괄 반환을 고집하는 일본 내 강경 세력의 비판도 거세졌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러시아가 갑자기 역사 문제와 미일 동맹 관련 안보 문제를 제기해 일본 측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은 56년 선언에 기초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북방영토 영유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완전히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결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푸틴 대통령도 평화조약 체결 후 북방영토에 미군이 주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해 일본을 자극했다.^{185/} 2019년 1월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과 아베 총리가 연달아 러시아를 방문해 평화조약 교섭에 진전을 도모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같은 해 6월

183/ “Заседание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Валдай»,”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21.10.21.,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6975>> (검색일: 2023.4.27.).

184/ 畔蒜泰助, “岸田新政権の対ロシア外交を考える (前編) —安倍政権の日露関係とプーチンの対日シグナル,” 笹川平和財団 国際情報ネットワーク分析 IINA, 2021.10.27., <https://www.spf.org/iina/articles/abiru_03.html> (검색일: 2023.5.30.).

185/ 吉岡明子, “北方領土交渉はなぜ進まなかったのか——安倍政権の安保政策を振り返る (2),” *キャ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 (2021.1.13.), <https://cigs.canon/article/20210119_5578.html> (검색일: 2023.6.1.).

열린 일러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고 이 시점에서 양국 간 교섭은 정체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8개 항 경제협과 함께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력적으로 추진했던 북방영토 내 일본과 러시아의 공동경제활동도 첫 단계에서부터 좌절됐다. 2016년 12월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러 양국 정부는 북방영토를 포함한 쿠릴열도에서 공동경제활동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로 한 신뢰 양성 조치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양측은 구체적인 계획안에 합의하지 못했고 일본 측이 요구한 “양국의 법적 입장을 손상하지 않는 제도”를 둘러싸고 인식차가 컸다. 일본은 쿠릴 열도에서의 공동 경제활동이 러시아 법 아래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러시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86/} 사실상 공동경제활동은 개시되지 못한 채 난항했다.

(3) 아베 대러 외교의 실패 원인

결과적으로 아베 총리의 대러 접근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토 문제에서 러시아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지 못했고, 중러 사이를 이격시키는 데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조약 체결과 영토 문제 해결이 진전을 보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평화조약 체결 시점에 대한 일러 간 인식의 차에 있었다. 아베 정부는 대러 협상을 ‘전후 외교의 총결산’으로 인식했고 일러 간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임기 중에 평화조약 체결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일본 측이 러시아에 대해 외교 및 국방장관 회의(2+2) 실시, 경제협력 8개 항 계획 그리고 북방

186/ “日ロ經濟活動 甘い交渉が招いた帰結,” 『朝日新聞』, 2021.7.29.,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4991878.html>> (검색일: 2023.7.14.).

영토에서 일러의 공동경제활동 등을 제안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측 생각은 달랐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악화한 미러 관계, 중국의 급속한 부상 등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정세를 고려해 일러 관계를 정치와 경제, 문화,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이었다. 결국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협상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했다.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아베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러 관계를 개선해야 할 목적은 중국과 관련된다. 중국의 급속한 대국화를 견제하고 중러 간 밀착 관계에 쐐기를 박는 한편, 일본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러시아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본이 평화조약 체결 후 대러 외교 강화를 중단하게 되면 러시아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의심했을 터이다.

아베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의 경우는 대러 외교에서 적극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20년 9월 29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가진 것이 전부였다.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이 짧고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면 외교가 불가능했다는 사정도 있었지만, 대러 접근의 최종 목표라 할 영토 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일본 측 판단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가운데 2021년 9월 3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로부터 일본에 보내는 또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쿠릴열도에 관세 면제 등 세금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특별경제구역을 만든다는 계획을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이다. 푸틴은 일본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이 특별경제구역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도록 주문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아베 총리 이후 동력을 상실한 일본의 관심을 부추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 행정부로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정책과 미중 경쟁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187/}

나. 기시다 정부의 대 러시아 전략

(1)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 제재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 예산 속에 일러 경제 협력을 위해 할당된 액수들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러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하루 전날인 2월 23일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내에 있는 친 러시아 2개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자, 기시다 정부는 즉각 이들 공화국과의 교역 금지, 비자 발급 금지 및 관련자 개인과 법인의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2월 24일 전쟁이 발발하자 25일 대러 비판 성명 발표와 동시에,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의 러시아 개인 및 단체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자산 동결과 수출 통제 시행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187/ “北方領土特区で揺さぶるプーチン氏 構想には不透明感も,” 『朝日新聞』, 2021.9.6. <<https://www.asahi.com/articles/ASP966Q53P96IPE005.html>> (검색일: 2023.7.15.).

일본은 G7과 EU 및 서방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며 강력한 대러 무역 제한과 신규 투자 금지 조치 등 일련의 제재를 시행해 나갔다.^{188/} 일러 양국 간 정치 관계는 원천적으로 중단되었다.

일본은 러시아가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유엔 헌장을 어기고 이웃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해 유럽과 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훼손했다고 비난한다. 3월 1일 일본 국회 중의원에서는 러시아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189/}

(2) 영토 반환 교섭의 중단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영토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비해 논조가 강경해졌다. 2022년 3월 7일 기시다는 북방영토(남쿠릴열도)를 ‘비활동 영토’라고 불렀고 같은 달 11일에는 러시아가 그곳을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190/} 러시아 외무부는 3월 21일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의 비우호적인 정책, 러시

188/ 小林英治, 松嶋希会, “日本政府による対ロシア経済制裁,” *BUSINESS LAWYERS*, 2022.8.30. <<https://www.businesslawyers.jp/articles/1136>> (검색일: 2023.7.14.).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2022년 말까지 일본 정부가 시행한 대러 제재의 상세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연구센터·제재분석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국의 대러 제재 비교 및 시사점,”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Brief』, vol. 1 (2022), pp. 48~49, <<https://www.shinkim.com/attachment/31665>> (검색일: 2023.7.15.).

189/ 衆議院,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略を非難する決議」(2022.3.1.)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_nsf/html/statics/topics/ketugi2_20301.html> (검색일: 2023.6.1.).

190/ “岸田首相 北方領土はロシアの不法占拠 平和条約の見通しは困難,” *NHK*, 2022.3.17.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317/k10013537341000.html>> (검색일: 2023.6.1.).

아를 해치려는 욕망, 제재 조치를 이유로 들어 러시아는 일본과 평화협정 체결이나 남쿠릴열도에서의 공동경제활동에 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1991년과 1999년에 일러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시행해 오던 일본 주민들의 남쿠릴열도 방문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 같은 러시아의 결정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평화조약 체결과 영토 문제 해결이 일본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191/}

일본의 대러 강경 자세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주민 학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조사해야 할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HRC)에서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4월 8일 일본 외무성은 부차 학살 사건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외교관 8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 것은 양국 수교 이래 처음이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4월 27일 일본 외교관 8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본이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반 러시아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192/}

4월 22일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에 대한 도전이며 탈냉전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북방영토 4개 섬을 일본의 고유

191/ “ロシアとの平和条約締結目指す方針、今後も維持=岸田首相,” *REUTERS*, 2022. 3.22. <<https://jp.reuters.com/article/russia-kishida-idJPKCN2LJ088>> (검색일: 2023.6.1.).

192/ “ロシア、日本外交官8人追放へ 報復措置,” *REUTERS*, 2022.4.28. <<https://jp.reuters.com/article/ukraine-crisis-russia-japan-idJPKCN2MJ1G8>> (검색일: 2023.6.1.).

영토이자 불가분의 일부이며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문장도 다시 등장했다. 『외교청서』에서 ‘불법 점거’라는 용어는 2003년 이후 모습을 감췄었다.^{193/}

일러 간 제재와 맞제재, 상대국에 대한 비난은 그 뒤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하지만 일본이 서방의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필수적인 일부 분야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산업과 에너지 분야다. 수산업은 전통적으로 일러 협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서, 1998년 일러 양국은 해양 생물 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근거해 일본은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 무상 기술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남쿠릴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허가받아 왔다. 하지만 일본의 대러 제재로 양국 간 금융 거래가 중단된 후, 2022년 6월 7일 러시아 측은 일본이 재정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협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9월 말, 일본이 러시아에 지불하는 문제가 해결되어 일본 어선의 조업은 재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대러 제재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194/}

에너지 분야 역시 일본의 대러 제재가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일본 정부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인 에너지 자원의 수출로를 차단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자 일본은 에너지 확보에 비상이

193/ “北方領土「不法占拠」復活 外交青書, 対露融和色消える,” 『産経新聞』, 2022.4.22.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422-NKO6UEK2EZKYTPMM2JP6NW6OVY/>> (검색일: 2023.6.2.).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와의 교섭 원활화를 위해 북방영토의 러시아 불법 점거를 공식 문서 등에서 언급하기를 꺼렸다.

194/ “安全操業交渉 再開の道筋を探りたい,” 『北海道新聞』, 2023.1.24. <<https://www.hokkaido-np.co.jp/article/791286>> (검색일: 2023.6.2.).

결렸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참여해 온 러시아 사할린-2 가스전의 천연가스 생산과 액화 프로젝트에서 일본 기업이 철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 정부는 일본에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다. 일본 LNG 수입의 8.84%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할린 가스전에서 일본이 철수할 경우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큰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 기업의 잔류를 허용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언론은 의외로 강경한 대러 자세를 견지하던 일본이 뒤에서는 실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대러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195/}

(3) 불투명한 일러 관계

기시다 정부가 전례 없이 강경한 대러 자세를 보이는 원인의 일차적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하지만 이 밖에도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는 아베 전 총리의 적극적인 대러 협력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일본 사회와 집권 자민당의 실망감이다. 아베 총리의 성과 없는 ‘퍼주기식’ 대러 협력 노선은 이미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일본 내에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의 악화하는 관계도 아베 전 총리를 곤혹스럽게 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친러 접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아베 전 총리는 2021년 초 『외교』 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국내 정치 상황과 어려운 국제 정세, 특히 미러 간 심각한 갈등 관계를 자신의 대러 외교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196/} 아베를 계승한 스가 총리

195/ “Sakhalin exception: the Russian energy Japan can’t quit,” *EURACTIV*, 2023.1.19.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news/sakhalin-exception-the-russian-energy-japan-cant-quit/>> (검색일: 2023.8.13.).

196/ 安倍晋三, “安倍外交7年8ヵ月を語る (中)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に

도, 또 그의 뒤를 이은 기시다 총리 역시 아베의 대러 외교 노선을 계승한다고 표명했지만 러시아와의 협상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밖에 기시다 정부의 강경 대러 입장을 추동한 요인들로는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와는 달리 러시아와의 협상에 매달려야 할 특별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부에서 주류 파벌에 속하지 않아 정국과 외교를 주도할 만한 역량이 부족한 탓에 대러 협상에 회의적인 자민당 주류의 분위기를 거스르기 힘든 점, 아베 정부 당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주도했던 경제산업성 출신 관료들이 물러나고^{197/} 스가 총리 이후 대러 관계에 무관심한 내무성 관료들이 내각을 차지한 점, 무엇보다 일본 외교의 주요 흐름이 미일 동맹과 쿼드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경도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2017년부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일본 내 배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북방영토와 일본 주변 해역 및 상공에서 단독으로 또는 중국과의 공조 하에 군사 활동을 증가시켜 온 사실도 기시다 총리의 대러 강경 노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중러 이격 전략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베 총리 사임 이후 스가와 기시다 정부를 거치면서 일러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어 갔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본이 G7의 일원이자 서방 진영 국가로서 러시아에 대한 유례 없는

みる戦略的思考,”『外交』, vol. 65 (Jan./Feb. 2021), <http://www.gaiko-web.jp/test/wp-content/uploads/2021/01/Vol65_p94-99_specialinterview_Shinzo_Abe.pdf> (검색일: 2023.5.13.).

197/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총리 비서관이나 하세가와 에이이치(長谷川栄一) 총리 보좌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政府内に亀裂、暗礁の対ロ交渉 トップ外交27回の果て,”『朝日新聞デジタル』, 2021.5.24, <<https://www.asahi.com/articles/ASP5N5JVNP4NUTFK00P.html>> (검색일: 2023.5.13.).

강력 제재에 나서면서 일러 관계는 냉전 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토 문제 해결과 평화 조약 체결이라는 대러 난제 해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더 이상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밀착, 세계 유일의 핵무기 피해국 입장에서 핵무기 불사를 운운하는 러시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혐오감, 일본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도 일러 관계의 개선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들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형태로 매듭지을지는 미지수지만,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일본과 서방 국가들의 대러 제재가 빠른 시일 안에 해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러시아로부터 철수한 일본 기업들이 수년 내로 다시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들다. 에너지 자원 수출에 의존하며 경제의 현대화와 다각화를 모색해야 하는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첨단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러시아 경제는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동안 일본은 러시아를 자국에 심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중국과의 군사적 연대를 강화할 경우, 이는 일본 안보의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인식될 것이며 일러 관계의 정상화 가능성을 더욱 지연시키는 주요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러 간 영토 교섭이 재개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0년 7월 수정된 러시아 헌법에 ‘영토의 할양 금지’ 조항이 추가된 사실도 전문가들의 부정적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조항에는 “국경 획정 작업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붙어 있다. 하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이 예외

규정이 일러 평화조약 교섭에 적용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러시아의 정치문화와 제도적 특성에 주목해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영토 문제와 평화조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일러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현 시점에서 일러 교섭 재개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또한 2021년 러시아가 제안한 쿠릴열도에서의 경제활동 특별 조치를 일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럴 경우, 러시아는 중국 등 일본 이외 기업이 여기에 참가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Ⅵ. 기시다 정부의 대북정책

이기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기시다 정부의 대북정책

1. 기시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

기시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핵·미사일 개발의 완전한 포기’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납치문제 해결’이라는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시다 총리는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 출신으로 평소부터 ‘비(非)핵’, ‘평화국가’ 일본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전략의 강화, NPT 체제 유지 등을 ‘기시다 이니셔티브’로서 주장하였다.^{198/} 기시다 본인도 평화세력이 주장하는 ‘핵 없는 세상(核のない世界)’이 아닌 ‘핵무기 없는 세상(核兵器のない世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강조하면서 핵문제에 대한 현실주의 인식을 나타냈다.^{199/} 따라서 기시다 총리는 핵문제에 대해 ‘비핵’, ‘평화’를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미일동맹 강화 및 NPT 체제 유지에 기반을 둔 강력한 대북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00/}

한편 기시다 정부는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국가의 책임 하에 해결

198/ 이기태,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평가: 한일, 북일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28, 2021.10.1.), p. 5.

199/ 위의 글, p. 5.

200/ 위의 글, p. 5.

해야 하는 긴급한 중요문제라고 인식한다.^{201/}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12건 17명을 인정하면서 이 중 12명이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북한 입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시다 정부는 북한에 의한 납치는 일본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기본적 인권 침해라는 국제사회 전체의 보편적 문제이며,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 문제라는 인식이다. 왜냐하면 납치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고통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정부는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인식 아래 납치피해자로서의 인정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 납치실행법의 인도를 북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202/}

이러한 가운데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총리는 “총리 주도 하에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따른 압력을 최대한 강화해 핵·미사일 개발의 완전한 포기, 모든 납치피해자의 즉시 일괄 귀국을 추구한다”는 정책을 언급하였다.^{203/}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8일 제205회 중의원 본회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납치문제는 최중요 과제이다. 모든 납치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대응한다. 나 자신도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결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베, 스가 정부의 방침을 계승하고 일북 정상회담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뜻을

201/ 김숙현, “일본 아베정부의 對北정책: 쟁점과 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Research Report』 No. 18-10, 2018.12.), p. 35.

202/ “[표] 일본 외교청서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 『연합뉴스』, 2021.4.27.

203/ 自由民主党, “総裁選2021 候補者プロフィール,” <https://www.jimin.jp/election/results/sousai21/profile/kishida_fumio.html> (검색일: 2023.6.13.).

표명하였다.^{204/} 2023년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최중요 과제인 납치문제는 심각한 인도 문제이며 그 해결은 일각의 유예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납치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을 실현시켜야 하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력으로 과단성 있게 대응한다. 나 자신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이다”라고 표명하였다.^{205/} 이처럼 기시다 총리는 국회 소신표명 연설과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일북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고, 일북 정상 간 대화를 통해 납치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북평양선언 20주년 하루 전인 2022년 9월 16일 송일호 일북교섭담당대사의 담화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조일평양선언을 백지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일호 대사는 일본인 납치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종전 입장을 반복하였고 일본의 무성의와 적대행위 때문에 평양선언이 백지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를 비난하였다. 또한 평양선언은 식민지 과거 청산이 핵심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다.^{206/}

기시다 총리는 9월에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22년이 일북평양선언 20주년을 언급하며, 납치·핵·미사일 현안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고, 일북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대화할

204/ 首相官邸, “第二百五回国会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2021.10.8.) <https://www.kantei.go.jp/jp/100_kishida/statement/2021/1008shoshinhyomei.html> (검색일: 2023.6.13.).

205/ 首相官邸, “第二百十一回国会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 (2023.1.23.)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3/0123shiseishin.html> (검색일: 2023.6.13.).

206/ “북한, ‘북일평양선언 20주년에 “위선의 극치” 일본 정부 비난,’ 『경향신문』, 2022.9.16.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209161018001>> (검색일: 2023.10.10.).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건 없는 정상 간 대화를 주장하였다.^{207/} 송일호 대사의 대일 요구사항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조건 없는 대화로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일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조건인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208/} 한편 기시다 정부는 일북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일본과는 물론 한국과도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남북관계와 일북관계는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시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대응을 둘러싸고 상당히 강경한 입장에서 일본의 방위 및 안보체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였다. 2022년 12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능력’ 보유가 인정되면서 한반도 유사와의 연관성이 부각되었다. 반격능력 보유는 일본이 기존에 고수해왔던 ‘전수방위원칙’에서 벗어나 일본이 공세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의 무력 공격을 단념시키고 주저하게 만드는 억제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209/}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반격능력 행사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북한을 한국과 별도의 국가로 인식해 온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공격이 현실화했을 때 자체 판단에 따라 반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210/}

207/ 外務省, “第77回国連總會における岸田総理大臣一般討論演説,” (2022.9.20.) <https://www.mofa.go.jp/mofaj/fp/unp_a/page3_003441.html> (검색일: 2023.6.13.).

208/ 이기태,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평가: 한일, 북일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p. 5.

209/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일본정세 2022』, p. 39.

210/ “일본 ‘유사시 한반도 반격’에 한국 “동의 구하라”...관건은 미국,” 『중앙일보』,

2. 대북 제재: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대응

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 및 대응

북한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핵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다.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2022년 1월 미국에 대해 언급해왔던 ‘신뢰양성조치’의 전면적인 재고와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을 지시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순항미사일을 포함해서 37회를 기록하면서 과거 가장 많았던 2016년의 15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움직임 아래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강하게 비난함과 동시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강력하고 확고하게 대처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16일 각의 결정을 통해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등 안보 3문서에서 상대로부터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 실시된 경우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하면서 2023년부터 5년 동안 방위비를 지금의 1.5배 수준에 해당하는 총액 43조 엔으로 증액하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일본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4회에 걸쳐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고, 2022년에는 더욱 발사 빈도가 늘어났다. 2022년 3월 24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해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5월 7일에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

2022.12.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6915>> (검색일: 2023.10.10.).

고, 10월 4일에는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일본 내에서 긴급대피령이 발령되었다.

일본 방위성은 2022년 7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인식”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궁극적 목표가 체제유지에 있으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통상전력 및 핵전력에 대항하기 위해 독자의 핵억제력 구축(핵무기와 운반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개발)이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핵·미사일 실험을 통한 기술적 진전을 감안하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가 이미 실현되었고, 사정거리도 노동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하여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문서에서는 최근 미사일 관련 동향으로 먼저 저고도 및 변칙 궤도 비행이 가능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자주 발사하며 그와 연관된 기술과 운영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철도 발사형 및 잠수함 발사형 등 발사 형태를 다양화하며 SRBM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 경향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실용화, 전술핵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불리는 미사일 발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방위성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동향은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협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발표된 북한의 ‘국방과 학발전 및 무기체제 관련 5개년 계획’ 등을 감안하면 북한이 또 다른 도발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211/}

211/ 防衛省, “北朝鮮による核・弾道ミサイル開発について,” 2023년2월, <https://www.mod.go.jp/j/surround/pdf/dprk_bm_2023.pdf> (검색일: 2023.6.13.).

나. 한미일 협력 대응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한미일 협력의 복원과 재구축을 강조하였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한미일 협력체제를 재구축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나타냈다.^{212/} 연이어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대응을 포함한 안보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5월 2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한미 군사훈련과 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3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와 동시에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한미일 3국이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213/}

9월 22일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목표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일본의 현안문제인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었다.^{214/}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의 정례화 및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 및 북핵 수석대표 간 긴밀한 공조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5월과 9월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모두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대북 대응 및 공조를 위한 한미일 외교협력을

212/ 최희식,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한일관계: 양극화된 정치와 대일정책,” p. 132.

213/ 外務省, “アントニー・ブリンケン米国防務長官、林芳正日本外務大臣及び朴振(バク・チン)韓国外交部長官による共同声明,”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350254.pdf>> (검색일: 2023.6.13.).

214/ 한국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 2022.9.23.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778> (검색일: 2023.6.13.).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6월 11일에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동시에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공동훈련을 포함한 중요과제에서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미사일 경계 및 탄도 미사일 탐지 및 추적 훈련 실시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다.^{215/}

이러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3국 간 군사훈련도 실시되었다. 8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미일은 이지스함을 포함해서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공동훈련(퍼시픽 드래곤)을 하와이 주변에서 실시하였다. 이 공동훈련은 약 4년 8개월 만에 실시된 3개국의 미사일 관련 공동훈련이었다. 환태평양합동훈련 ‘림팩’에 맞춘 형태로 한미일에 더해 호주, 캐나다 해군의 이지스함과 프리켓함이 참가하였고,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할 때의 정보를 각국 함정에서 공유해서 요격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한국과 동해 등에 전개하는 해상자위대와 미해군 함선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훈련을 통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원활한 의사소통 향상을 모색하였다.

한미 해군과 해상자위대는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하였다. 대잠수함전 훈련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 그 중에서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한미일 3

215/ 防衛省, “日米韓防衛相會談共同聲明 (2022, 6, 11.),” <https://www.mod.go.jp/j/aproach/exchange/area/2022/20220611_usa_kor-j.html> (검색일: 2023.6.13.).

국 해군의 대응능력 강화가 목적이었다. 이 훈련에는 미 해군 원자력추진 함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유도미사일순양함 찬슬러스빌함,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 신형 준이지스급 구축함 아사히함이 참가하였다. 한미일 대잠훈련은 2017년 4월 제주 해역 남방공해상에서 실시된 첫 훈련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한미일은 미국 주도 다국적 해상훈련인 ‘퍼시픽 뱅가드’ 훈련에서 한미일 공동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하였다. 그와 함께 2022년 8월과 2023년 5월 실시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도 한미일 3국이 참가하여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2년 10월 4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일 3국은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편 11월 13일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라며 대북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 및 실질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2023년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한일 지소미아는 정상화되었다.

다. 지속적인 대북 제재 실시

북한은 2006년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간간이 진행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한국 등은 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면서 더욱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에 정책 변경을 유도

해 왔다. 일본도 독자 제재조치로서 2022년에 3번에 걸쳐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하는 추가 조치를 실시하였다.

표 VI-1 일본의 주요 대북 제재조치^{216/}

*밑줄: 유엔안보리결의에 기반한 조치
<p>1. 사람·선박·항공기의 왕래</p> <p>(1) 인적 왕래 규제(유엔안보리결의 상의 특정 인물의 도항 금지도 담보) 북한 국적자 입국의 원칙적 금지, 일본인에 대한 북한으로의 도항 자제요청, 일본 국가공무원의 북한 도항의 원칙 보류 등</p> <p>(2) 모든 북한적 선박(인도 목적을 포함),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일본적 선박을 포함) 및 유엔안보리 결정 등에 근거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된 선박의 입항 금지</p> <p>(3) 북한과의 항공 전세기편의 출입 금지</p> <p>(4) 금지 제품을 적재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항공기의 이착륙·상공 통과 불허가</p> <p>2. 물자의 흐름</p> <p>(1) 북한에 대한 모든 품목의 수출 금지 (안보리 결의 상의 수출 금지(무기(소형 무기를 포함), 노예품, 항공연료, 신 품의 헬리콥터 및 선박 등), 원유 및 석유 정제품의 북한으로의 공급 규제도 담보)</p> <p>(2)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품목의 수입 금지 (안보리 결의 상의 수입 금지(무기, 특정 천연자원(석탄, 철, 철광석, 구리, 니켈, 은, 아연 등을 포함), 해산물, 섬유제품 등)도 담보)</p> <p>(3) 화물 검사법 등에 근거한 북한 관련 특정 화물의 검사(안보리 결의 상의 검사를 담보)</p> <p>3. 자금의 흐름</p> <p>(1) 북한 핵·미사일 계획 등에 관련하는 단체·개인의 자산 동결(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조치를 포함)</p> <p>(2) 북한과의 자금 이전의 방지 조치 강화</p> <p>① 북한의 핵관련 계획 등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p>

216/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調査室,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p. 270,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rchome.nsf/html/rchome/Shiryo/doukou207rachi.pdf/\\$File/doukou207rachi.pdf](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rchome.nsf/html/rchome/Shiryo/doukou207rachi.pdf/$File/doukou207rachi.pdf)> (검색일: 2023.6.13.).

송금, 송금 수취, 자본거래 금지

- ② 대북 송금의 원칙적 금지
- ③ 북한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 등의 휴대 수출 신고 하한액: 10만엔 초과
- (3) 일본 금융기관 등에 의한 북한 지점 개설 및 북한의 금융기관과의 콜레스 관계의 확립, 그리고 북한 금융기관의 일본에서의 지점 개설 등의 원칙적 전면 금지

기시다 정부는 2022년 10월 18일 각의 결정을 통해 9월 25일 이후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가 제재를 결정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다섯 개 단체를 새로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정하였다. 조선노동당의 군수공업부 산하에 있는 ‘로켓공업부’와 북한 소재 무역회사 4개의 자산을 새롭게 동결하였다. 자산동결 대상은 총 134 단체, 120명이 되었다.^{217/}

기시다 정부는 12월 2일, 북한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3단체와 개인 1명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기반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는 북한이 11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조치였다.

또한 기시다 정부는 2023년 2월 18일에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일본의 EEZ 내로 낙하시킨 것과 3월 16일에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근거로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였다. 즉 자산 동결 등 조치의 대상자로 지정된 북한의 핵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계획 및 기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 등에 관여하는 자(제3자)에 대하여 첫째, 외무성 고시에 의해 지정된 자에 대한

217/ “北朝鮮ミサイル、政府が追加制裁 5団体の資産凍結,” 『日本経済新聞』, 2023.10.18.

지불 등을 ‘허가제’로 하였고(지불 규제), 둘째, 외무성 고시에 의해 지정된 자와의 자본거래(예금계약, 신탁계약 및 금전의 대부계약) 등을 ‘허가제’로 하였다(자본거래 규제).^{218/}

기사다 정부는 2023년 4월 7일에는 13일로 기한마감이 임박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는 것을 각의 결정하였다.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금지와 북한에 기항 이력이 있는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입항금지를 계속 유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수입과 입항 금지 등의 제재를 발동하여 왔고 제재대상을 확대해서 조치를 연장해 오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해상보안청에 의한 초계활동과 자위대에 의한 경계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안보리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의 정보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북한 선박과의 ‘환적(瀬取り)’을 실시하는 등 위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행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 관계국에 대한 관심 표명, 대외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활동에 대해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가 유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일미군시설 및 구역을 활용해서 항공기에 의한 경계감시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미국 해군의 다수 함정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영국 해군의 구축함 등이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경계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 관계국 간의 정보공유 및 조정이 진행되는 것은 대북 제재 관련 다자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218/ 外務省, “北朝鮮の核その他の大量破壊兵器及び弾道ミサイル関連計画その他の北朝鮮に関連する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決議により禁止された活動等に関する者に対する資産凍結等の措置の対象者の追加について,” (2023.3.17.),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1_001373.html> (검색일: 2023.6.13.).

3. 대북 대화: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모색

가. 기시다 정부의 대북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2002년 9월 17일 제1차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 방문 시 김정일 총서기가 납치를 인정하면서 사죄하고 ‘일북평양선언’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소가 히토미(曽我ひとみ)를 비롯한 일본인 납치자 5명이 귀국하였지만,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를 비롯한 8명은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2004년 5월 22일 고이즈미 총리는 두 번째 평양 방문을 통해 하스이케 카오루(蓮池薫) 등 납치 피해자 가족 5명과 함께 귀국하였다. 하지만 12월 8일,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이라며 제공된 것이 다른 사람의 유골이라고 발표하면서 일본 국내 여론이 악화되었다.

2013년 5월 14일 이이지마 이사오(飯島勲) 내각관방참여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당중앙위원회 서기,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대사와 회담하면서 일북 간에 대화의 기회를 만들었다. 이후 2014년 3월 20일 일북 정부 간에 비공식 의견교환이 실시되었고 정부간 협의 재개에 합의하였다.^{219/} 그 결과 5월 29일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일북이 납치피해자 재조사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2016년 1월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월 7일에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북한 정부는 모든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전면 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

^{219/} 김숙현, “일본 아베정부의 對北정책: 쟁점과 전략,” p. 46.

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이후 일북 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역대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떠한 결론이 맺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해왔다. 스톡홀름 합의(2014년)에서 납치 피해자의 재조사를 약속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갑자기 협상을 중단한 경험도 갖고 있다.

현재 북한 정부는 미국, 한국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와는 당장의 대화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 접근하는 것은 어쩌면 전통적인 수법일지도 모른다. 일본은 그동안 ‘납치·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목표로 북한에 압력을 가해왔다.^{220/}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협력을 추진하면 한국, 미국과의 3국 공조에 균열이 생기거나 핵·미사일 문제의 양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북대화 재개를 위한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가 작용하는 가운데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를 표명한 기시다 총리는 9월 13일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해 “선택지로 배제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조건을 붙이지 않고 회담에 임하고 싶다는 생각을 표명했으며, 스가 총리도 같은 방침을 계승하고 있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였다. 미북관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고 남북관계에

220/ 최희식 외 공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205.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전체로서의 제재에 의한 압력을 최대한 높여 핵·미사일 개발의 완전한 포기를 실현하고 모든 납치피해자의 즉각 일괄 귀국을 목표로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스가 정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제재’, ‘압력’이라는 단어가 부활한 것이다.

2023년 들어 기시다 정부는 일본 입장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023년 3월과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납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일본 입장을 지지하였다.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는 북한에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미일과 대북안보협력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문제에서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한편 아사히 신문(2023년 9월 29일자)은 2023년 3월과 5월에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두 차례의 일북 간 비밀접촉이 있었다고 보도하였다.^{221/}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2023년 5월 27일, ‘모든 납치피해자의 즉시 일괄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본인 직할의 고위급 레벨에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싶다”라고 표명하였다. 기시다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일북 비밀접촉의 긍정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5월 29일 외무성의 박상길 부부상 명의로 발표된 담화에서 “일본이 새로운 결단을 내려서 관계 개선의 활로를 모

221/ “日朝、東南アジアで今春に2回秘密接触 高官の平壤派遣も一時検討,”『朝日新聞』, 2023.9.29. <<https://www.asahi.com/articles/ASR9X6KR7R9XUTFK019.htm>> (검색일: 2023.10.1)

색하려고 한다면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이례적인 속도로 응답하였다. 물론 여전히 ‘납치문제’가 ‘해결 완료’되었다는 원칙을 반복하면서 변해야 하는 것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커다란 변화라고 말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엄중한 것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북한은 2016년 납치 문제의 재조사를 중단한 이후 미국과 한국에 대화 공세를 나타낸 적은 있어도 일본을 거의 무시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담화 발표 배경에는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기시다 총리의 대북정책을 알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있다. 즉 북한 정부는 일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스가 전 총리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조건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 재개시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며 기시다 총리의 진의를 묻는 것이 북한측 담화의 주목적인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납치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 외에도 납치피해자 가족의 ‘고령화’라는 국내정치적 이유도 존재한다. 2023년 현재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인 사키에(早紀江)는 87세, 아리모토 게이코(有本恵子)의 아버지인 아키히로(明弘)는 95세이다.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납치피해자 중 생존해 있는 부모는 이 두 명뿐이며 해결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납치피해자 가족의 고령화를 염두에 두고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권문제’라고 강조해왔다. 앞서 언급한 5월 집회에서는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절박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시다

총리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일북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그 실현은 곤란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북한 역시 일본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 2023년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형성된 한미일 간 협력구도를 흔들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북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의 경제협력과 투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납치 피해자 조사 결과를 과연 제시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현재 독자적으로 실시 중인 대북제재에서 해제 가능한 부분을 북한측에 어디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일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게다가 2023년 우크라이나 정세를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접근하고 있어 북한의 대화상대로서 일본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북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기시다 총리가 공언한 고위급 수준의 협의, 즉 총리특사의 평양 파견 시기를 잡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조기 일북 정상회담 개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나. 납치자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은 주체적으로 북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일본은 각국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G7 정상회의, QUAD(미일인호)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유엔 관련 국제회의와 같이 외교 방면의 모든 기회를 통해 납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역시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납치문제를 언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9년 2월,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첫날부터 시작된 일대일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납치문제를 제기하였고, 납치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곧 이어 시작된 저녁식사에서 납치문제를 제기하였고 미일 정상 간에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222/}

또한 2022년 1월 22일 미일 정상회담과 5월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납치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요구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5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납치피해자 가족과 면담하여 납치피해자를 생각하는 가족들의 심정과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향한 미국의 지원을 요구하는 발언을 경청하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 외에도 기시다 총리는 10월 4일, 11월 13일, 2023년 1월 13일, 연이어 개최된 미일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계속된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였고 바이든 대통령도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2019년 6월 일중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같은 달에 열리는 중북 정상회의에서 일북관계에 관한 일본의 입장, 아베 총리의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발언하였고, 납치문제를 포함한 일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2022년 11월 17일 일중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납치문제의 즉시 해결을 향한 이해와 지지를 요구하였고 양국 정상은 계속해서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여러 번 북

^{222/} 外務省, 『外交青書(令和5年版)』(東京: 日経印刷, 2023), p. 57.

한에게 납치문제를 제기하였고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납치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였고 한국 정부는 북한에게 납치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2022년 10월 6일 한일정상 전화회담, 11월 1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계속된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를 표명하였다.

4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EU가 제출하고 일본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상황결의안이 무투표로 채택되었다. 12월에는 안보리 비공식협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협의 후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납치문제 해결, 특히 납치피해자의 즉시 귀국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는 2005년 12월부터 인권담당대사를 임명하는 등 국제사회에 인권보장 관점에서 모든 외교상의 기회를 통해 납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인권이사회, 총회(제3위원회(사회·인권문제) 및 본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북한인권상황결의’가 채택되고 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식회의에서 협의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납치피해자 가족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심포지움 참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시다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긴밀히 연계하고 협력하면서 납치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VII. 결론: 한국 정부의 대일전략 제언

이기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결론: 한국 정부의 대일전략 제언

1. 한국 정부의 대일전략 추진시 고려 사항

일본 기시다 정부의 미국, 한국 등을 포함한 협력외교와 중국, 러시아, 북한을 대상으로 한 위협대응외교 혹은 위기관리외교를 통해 한국정부가 향후 대일 전략을 추진할 때의 고려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시다 총리의 외교노선이 아베-스가 외교노선의 계승이라는 측면이다. 전후 요시다 노선 계열인 고치카이 회장인 기시다 총리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주장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와 원칙의 중시’, ‘기후변동 문제 등 지구규모 문제의 적극적 대처’,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단호하게 지키는 대처’를 3개의 외교축으로 설명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미일동맹관계 강화, 북한의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개발문제 해결, 오키나와 기지부담 경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등 새로운 정책은 없다. 단지 히로시마 출신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시다 총리의 외교노선은 기본적으로 전임 총리인 아베-스가의 외교노선과의 ‘연결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의 확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시다 총리가 표방하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는 전반

적으로 아베 외교안보 노선의 계승이다. FOIP 정책은 NATO와 대만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적극적인 인권 외교가 추가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안보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핵심기술에 대한 일본의 경쟁력 강화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엔 기능에 대한 실망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엔 개혁 차원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핵 군축 및 비확산을 강조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표방하지만, 방위비 증대 및 반격능력 도입 등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보다 전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본의 FOIP 정책이 국내외 및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전체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시다 총리의 외교노선은 전임 총리들과의 외교노선을 뛰어넘는 새로운 측면을 보일 가능성을 항상 주시해야 한다.

셋째, 기시다 정부의 동아시아 대외안보전략을 총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시다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기조는 가치관 외교에 입각해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국가와의 안정적인 양자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리얼리즘이 전개되고 있다.

미일동맹은 ‘통합억제’를 포함하여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며 일체화되어 가고 있다. 경제안보와 사이버·우주 영역 및 신기술 분야의 미일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 한미일 협력은 대북 정책공조와 정보공유 및 공동 군사훈련 증진과 같은 안보 영역과 경제안보대화 출범과 같은 경제안보, 중국의 진출이 활발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및 메콩강에서의 공동행동 등 협력의 폭과 깊이가 커져갈 것이다. 한일 안보협력은 한미일 협력의 증진에 힘입어 점점 협력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안정적 양자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데,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20%대(2023년 12월 시점)로 하락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중 양국은 양자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다.^{223/} 일본의 강력한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북방영토 교섭의 중단과 북방영토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 증가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문제·핵·미사일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무조건적 대화’를 호소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일북관계 또한 악화된 상황이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vs. 중러북의 경쟁구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넷째, 일본의 안보전략 3문서 개정과 방위정책의 대전환이다. 2022년 12월에 개정된 일본의 안보전략 3문서는 일본 방위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224/} 특히 반격능력 보유는 일본이 기존에 고수해왔던 ‘전수방위원칙’에서 벗어나 일본이 공세적이고 능동적으로 무력공격을 단념시키고 주저하게 만드는 억제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225/}

하지만 반격능력을 실행하는 데에는 일본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일동맹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연계는 더욱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 등을 포함해서 미일동맹의 군사적 역할분담이 더욱 논의될 것이다. 즉 미국과 일본이 기존 ‘창’과 ‘방패’의 관계에서 ‘창’과 ‘짧은

223/ 세종연구소, “시진핑 집권 3기와 중국의 대내외 정세 향방,” 2022 세종-한국정치학회 공동패널 결과보고, 2022.12.9. <<https://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11&seq=6900>> (검색일: 2023.10.1.)

224/ 외교안보연구원 일본연구센터, 『일본정세 2022』, p. 39.

225/ 위의 책, p. 39.

창'의 새로운 역할분담이 확립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반격능력 실행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대외 군사협력 관계이다. FOIP는 미국을 포함한 호주, 인도와 같은 QUAD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과 같은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일본은 양자 간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미일호 등 다자간 군사훈련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FOIP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칙기반질서(rules-based order)'를 수호하기 위한 안보군사협력 강화와 일치한다. 지역질서 안정을 위해 일본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QUAD 국가 및 유럽의 관여 확대 그리고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 안보 지원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할 것이다.

여섯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과 대한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파악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가 속한 기시다파는 미일관계를 기축으로 삼으면서도 일중관계도 관리하면서 '전방위 외교'를 지향하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미중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외교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일본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 어느 정도 확실한 '위협대응'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시다 외교는 서방진영과 보조를 맞추는 외교로 중심축을 옮겼다.

이에 따라 일본 입장에서는 미중대립 구도에서 한국 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의 비중에 따라 대한정책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미중대립 구도에서 외교적으로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고, 협력 가능한 영역이 크다고 판단하면 한일 간 쟁점

이 한일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감히 관리하려 할 것이다. 반대로 대외정책에서 공유할 부분이 작다고 판단되면 한일관계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국내여론을 설득하면서 적극적인 한일협력으로 나가려는 동기부여가 약화될 수 있다.

일곱째, 일본의 주요 안보위협은 한반도 위기(북핵 위기)에서 대만 위기로 이동하였다. 대만 위기는 센카쿠 제도와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곧 일본의 위기이며 해상수송로(sea lane) 위기이기 때문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다. 기시다 정부는 한반도 위기는 가능한 한 관여하고 싶지 않으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일 안보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

2. 정책제언

위와 같은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일전략 수립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언한다.

첫째, 일본 자민당 내 최대파벌인 아베파의 외교정책 특성을 이해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아베파의 외교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베파는 아시아 유화 외교를 지향하고 군사정책 강화에 온건한 입장인 기시다파와 달리 군사정책을 포함한 적극적 대외정책을 주장한다. 아베 전 총리 등 일부 의원은 ‘비핵3원칙’ 개정 및 ‘핵 공유’와 같은 일본의 비핵정책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최근에는 한국, 중국과의 ‘역사전(歷史戰)’을 강조하면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해서 한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 이후 아베 없는 아베파의 외교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베파의 강경한 대외정책과 역사전 대응은 아베 전 총리라는 존재감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반대로 주변국과의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최종 조정 역할 역시 아베 전 총리였기 때문에 아베파 강경파를 컨트롤할 수 있었다.^{226/}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시 일본 강경보수층을 설득하고 견제하였던 아베 전 총리의 역할이었다. 아베 없는 아베파의 외교정책이 향후 기사다 정부의 대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

현재 아베파는 새로운 파벌 회장을 선출하지 못 한 채 소수의 유력 중견 정치인들이 중심이 된 집단지도체제로 파벌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아베파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함께 기사다 총리가 향후 모테기 자민당 간사장, 아소 자민당 부총재와 어떻게 연합해서 정권을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기사다 총리가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아베파의 영향력에 벗어나서 기사다 총리의 독자적인 외교안보노선이 전개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현재 중국, 북한, 러시아의 안보위협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증가와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남서제도가 전쟁에 연루되는 ‘대만 유사’ 상황에 대한 대비가 최대의 외교, 안보정책의 관심사이다. 즉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문제’보다는 ‘대만 유사’에 관심이 높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유사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

^{226/} 위의 책, p. 38.

고, 현재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단,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라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라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다. 따라서 먼저 한반도 유사와 대만 유사에 연계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일이 어떤 역할 분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즉 동아시아 국제질서 현상유지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각각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일본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유사 상황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에 대한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하다. 한반도 유사시 비전투요원후송작전(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이나 미군의 후방지원 역할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미국과의 협조에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기관리를 항상 염두에 둔 실용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미국에만 경도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대외전략만을 전개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일본 외교의 특징은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전방위 외교’이다. 1957년 외교청서에서 밝힌 일본 외교는 유엔 중심주의, 서측 진영의 일원(미일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 강화(공산주의 외교 관리)라는 전방위 외교를 기조로 하고 있다.

물론 현재 일본의 기본 외교 방침은 ‘미일동맹 강화에 이익이 된다면’이라는 점이다. 미일동맹 강화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한 외교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항상 이러한 갈등 관계 국가들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놓고 있다. 최근 한미일 협력강화에 따라 중러북 협력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한미일 vs 중러북’ 대립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일중 3국

협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한미일과 한일중이 동시에 진행된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일북 대화 및 일북 관계정상화를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대일정책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이 미북관계의 정상화와 일북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되는 것을 상정하였다.^{227/} 즉 남북관계가 한국의 주변국 외교보다 선결되어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 및 실험을 중단하지 않고 있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및 발전을 통해 한국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위협 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및 러북 군사연대 강화, 중러북 협력 가능성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북한 접근에 반대하지 않는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북 접촉 시에 비밀외교가 진행되었는데 한국 및 미국과의 정보공유가 있다면 굳이 일북 접촉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 태도였다. 오히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양측에 권고하였고, 이와 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과 일북평양선언 발표가 실현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일본의 대북 접근을 지지하고, 일북 대화 및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227/} 양용모, “평화리더십과 한반도신경제구상: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3권 2호 (2019), p. 82.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국제정세전망』.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일본정세 2022』.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2023.
-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국제정세 전망 2023: 복합경쟁(Complex Competition)』.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2.
- 이기태·김두승.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이기태·배정호·신정화. 『한반도 평화변영과 북일관계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이동규. “중국식 현대화로 미국과의 복합경쟁에 나서는 중국.” 『2023 아산국제정세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2.12.
- 조남훈·이장욱·조은일. “글로벌 안보정세 전망.” 『2023 국방정책 환경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2.12.
- 최강. “복합경쟁의 시대와 격변하는 세계.” 『2023 아산국제정세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2.12.
- 최은미. “새로운 질서 구축의 선봉에 서려는 일본.” 『2023 아산국제정세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2.
- 최희식·김남은·윤대엽·오승희·조은일·최은미·윤석정.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최희식·이기태. “일본: 능동적 방위전략 전개와 영향력 확대.” 『2022 동아시아전략평가』. 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 엮음.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22.

外務省. 『外交青書(令和4年版)』. 東京: 日経印刷, 2022.

_____. 『外交青書(令和5年版)』. 東京: 日経印刷, 2023.

岸田文雄. 『岸田ビジョン 分断から強調へ』. 東京: 講談社, 2021.

防衛省. 『防衛白書: 日本の防衛(令和3年版)』. 東京: 日経印刷, 2021.

_____. 『防衛白書: 日本の防衛(令和4年版)』. 東京: 日経印刷, 2022.

2. 논문

권보람. “2022년 제19회 상그릴라 대화의 주요 특징과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2.6.23.

권태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군사논단』. 제109호, 2002년 봄.

김강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The World and Eurasia』. 제1권 2호, 2022-2023.

김기범. “쿼드 정상회의의 결과와 한국 국방전략에 대한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2.6.16.

김남은. “21세기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 중국위협에 대한 전략과 지역구상.” 『일본학』. 제60집, 2023.

_____. “일본이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 대북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일본공간』. 제32호, 2022.

김남은·서승원. “아베 정권의 안보위협 인식과 대응: 보통국가화의 촉진제로서의 위협인식.” 『일본학』. 제51집, 2020.

김선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응: 한반도 외교안보에 주는 함의.” 『국제지역연구』. 제26권 4호, 2022.

- 김숙현. “일본 아베정부의 對北정책: 쟁점과 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Research Report, No. 18-10, 2018.12.
- 김일수.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민족연구』, 제80호, 2022.
- 김지영.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하의 ‘한국 패싱’론 분석.” 『일본학보』, 제132권, 2022.
- 두진호·조비연.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향.”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 분석』, 22-21, 2022.4.27.
-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미일동맹 정책과 지구본 외교: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사이.” 『국방연구』, 제61권 3호, 2018.
- _____.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과 한반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포커스』, No. 2023-01, 2023.1.14.
- 아산정책연구원. “복합경쟁의 시대와 격변하는 세계.”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23-01, 2023.1.2.
- 양용모. “평화리더십과 한반도신경제구상: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3권 2호, 2019.
- 윤석정. “우크라이나 전쟁과 일본의 대외정책.”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22-51, 2023.4.
- 이강규. “2022년 동북아 안보정세 평가와 2023년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3.1.4.
- 이기태. “일본의 대베트남 안보협력: 소프트 안보협력.” 『일본학보』, 제122집, 2020.
- _____.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평가: 한일, 북일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28, 2021.10.1.
- 이동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 대응.”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23-11, 2023.6.14.
- 이유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국제질서와 규범의 대립: 지배

- 의 윤리에서 초월적 규범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2집 4호, 2022.
- 이정훈. “일본의 인도태평양 분석.” 『동서연구』. 제30권 4호, 2018.
- 이한얼.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 미중 전략경쟁에 미친 영향 검토: 상수로서의 중국과 변수로서의 미국.”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제6집 2호, 2022.
- 장세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분석과 대안』. 제6집 2호, 2022.
- 장혜진.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의 평가 및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2.1.19.
- 조은일.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서 발간과 주요 쟁점.” 『국방논단』. 한국 국방연구원. 2023.2.28.
- 주재우.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국제질서, 미중관계와 우리의 대응전략.” 『전략연구』. 제85호, 2022.
- 최희식.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한일관계: 양극화된 정치와 대일정책.” 『일본연구논총』. 제56권, 2022.
- _____.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해양안전보장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1권 4호, 2018.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2년 나토 정상회담.” 『세계 주요 군사동향』. 제54호, 2022.
- 今井和昌·藤井隆明. “新たな国家安全保障戦略を踏まえた防衛力の抜本的強化.” 『立法と調査』. 第453号, 2023.

3. 기타 자료

- “バイデン氏, 台湾有事なら軍事的関与 日米共同会見.” 『日本經濟新聞』. 2022.5.23.
- “米大統領ウクライナ対応めぐり 岸田首相に謝意訪日の意向も.” *NHK*. 2022.3.1.
- “日米首脳会談, 安保戦略改定見据え認識確認へ.” 『産経新聞』. 2022.5.22.
- 外務省. TICAD VI開会に当たって・安倍晋三日本国総理大臣基調演説. 2016.8.27.
- _____. “インド太平洋經濟枠組み(IPEF)の立上げに関する首脳級会合.” 2022.5.23.
- _____. “二つの海の交わり(Confluence of the Two Seas).” 2007.8.22.
- _____. 日米共同声明. 2023.1.17.
- _____. 日米首脳共同声明 “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の強化.” 2022.5.23.
- _____.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2 + 2」)共同発表. 2022.1.7.
- _____. 第77回国連総会における岸田総理大臣一般討論演説. 2022.9.20.
- _____.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2 + 2)共同発表. 2023.1.11.
- _____. “北朝鮮の核その他の大量破壊兵器及び弾道ミサイル関連計画その他の北朝鮮に関連する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決議により禁止された活動等に関する者に対する資産凍結等の措置の対象者の追加について.” 2023.3.17.
- _____. “岸田総理大臣のインド世界問題評議会(ICWA)における総理政策スピーチ.” 2023.3.20.

- 경제産業省. “ウクライナ情勢に関する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に基づく措置について.” 2023.5.26.
- _____.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に基づく輸出貿易管理令等の改正について(ロシアの産業基盤強化に資する物品の輸出禁止措置).” 2023.3.31.
-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安全保障調査会. “新たな国家安全保障戦略等の策定に向けた提言: より深刻化する国際情勢下におけるわ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防衛力の抜本的強化の実現に向けて.” 2022.4.26.
- 首相官邸. 第二百五回国会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2021.10.8.
- _____. “岸田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22.12.16.
- _____. “岸田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22.2.25.
- _____. 第二百八回国会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 2022.1.17.
- _____. 第二百十一回国会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 2023.1.23.
- 防衛省. “国家防衛戦略について.” 2022.12.16.
- _____. “防衛力整備計画について.” 2022.12.16.
- 内閣官房.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令和4年12月16日).” 2022.12.16.
- “‘반미연대’로 뭉친 시진핑·푸틴 美, 세계안정 훼손 말라.” 『연합뉴스』. 2023.3.22.
- “기시다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의 초석’.” 『연합뉴스』. 2023.5.18.
- “기시다 만난 바이든, 日 적기지 공격 능력 ‘지지’.” 『TV조선뉴스』. 2023.1.14.
- “기시다, 시진핑과 회담 앞두고 中이 주권침해.” 『동아일보』. 2022.

- 11.15.
- “대만군, 처음으로 대대급 부대 미국 파견…미군과 합동훈련.” 『연합뉴스』, 2023.7.24.
- “美, 대만에 ‘동맹국 무기 지원’ 첫 적용… 사실상 주권국가 대우.” 『동아일보』, 2023.9.1.
-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한반도는 안전한가.” 『참세상』, 2022.4.8.
-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BBC NEWS 코리아』, 2023.9.21.
- “바이든, 우크라 깜짝 방문…‘푸틴이 틀렸다’.” 『조선일보』, 2023.2.21.
- “바이든, 일본 반격능력 보유에 ‘역사적’…군사대국화 날개 커진 일본.” 『한겨레』, 2023.1.14.
- “바이든, 적기지 공격 능력 ‘전폭 지지’…일, 군사대국화 날개.” 『한겨레』, 2023.1.14.
- “바이든·기시다, 서로 이름 부르며 ‘진짜 친구’ ‘소중한 내 친구’.” 『연합뉴스』, 2023.1.14.
- “북한, ‘북일평양선언’ 20주년에 “위선의 극치” 일본 정부 비난.” 『경향신문』, 2022.9.16.
- “스가 “동중국해에서 日 주권 침해 활동 계속”…중국 견제.” 『머니투데이』, 2020.11.15.
- “‘안보 의제’ 강조한 2023년 중국 ‘양회’.” 『한겨레』, 2023.3.26.
-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극체제의 입구?” 『한겨레』, 2023.3.23.
- “日방위백서, 독도방어훈련 등 ‘韓방위당국 부정적 대응’ 규정.” 『연합뉴스』, 2021.7.13.
- “일본, ‘준동맹국’ 호주와 신안보선언…긴급사태시 중국 공동대응.” 『연합뉴스』, 2022.10.22.
- “日, 중국발 오염수 후폭풍에 수백억엔 추가 투입.” 『서울경제』, 2023.8.31.
- “주일美해병 ‘연안작전연대’ 임무는…유사시 신속기동군 전망.” 『연합

- 뉴스』. 2023.1.24.
- “중국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MBC뉴스』. 2023.8.24.
- “쿼드·오커스보다 넓고 깊게…중국 ‘포위하는’ 미국.” 『경향신문』. 2023.8.20.
- “[포] 일본 외교청서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 『연합뉴스』. 2021.4.27.
- “[한일 정상회담] 서틀외교·지소미아 복원…尹, 첫 방일 마치고 귀국 길.” 『연합뉴스』, 2023.3.17.
- “NATO’s proxy war highlights urgent need for a multipolar future.” *Global Times*. 2023.2.17.
- “Ukraine invasion: Putin puts Russia’s nuclear forces on ‘special alert’.” *BBC News*. 2022.2.28.
- 김숙현. “최근 일중관계 개선동향과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no. 61, 2020.2.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10682.pdf>> (검색일: 2023.3.13.).
- 세종연구소. “시진핑 집권 3기와 중국의 대내외 정세 향방.” 2022 세종-한국정치학회 공동패널 결과보고. 2022.12.9. <<https://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11&seq=6900>> (검색일: 2023.10.1.).
-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연구센터·제재분석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국의 대러 제재 비교 및 시사점.”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Brief』. vol. 1, 2022. <<https://www.shinkim.com/attachment/31665>> (검색일: 2023.7.15.).
- 마리오 코이. “후쿠시마 오염수: 중국,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67% 급감.” BBC NEWS 코리아. 2023.9.21.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glexpy48rko>> (검색일: 2023.9.23.).

- 포럼 스태프. “일본과 인도, 아프리카에서 전략적 개발 협력 추진.” Indo-Pacific Defense FORUM, 2018.4.3. <<https://ipdefenseforum.com/ko/2018/04/일본과-인도-아프리카에서-전략적-개발-협력-추진/>> (검색일: 2023.4.2.).
- 한국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2022.9.23.).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778> (검색일: 2023.6.13.).
- VOA 뉴스. “푸틴-아베, 다음주 싱가포르서 정상회담... “쿠릴열도 공동개발 논의.” VOA 한국어. 2018.11.9. <<https://www.voakorea.com/a/4651394.html>> (검색일: 2023.6.1.).
- NATO. Madrid Summit Declaration, 2022.6.22. <https://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196951.htm> (검색일: 2023.10.1.).
-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검색일: 2023.10.1.).
-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12,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검색일: 2023.10.1.).
- 2023 HIROSHIMA SUMMIT. G7 Hiroshima Leaders’ Communiqué (2023.5.20.). <https://www.mofa.go.jp/ms/g7hs_s/page1e_000690.html> (검색일: 2023.10.1.).
- “Sakhalin exception: the Russian energy Japan can’t quit.” *EURACTIV*, 2023.1.19. <<https://www.euractiv.com/secti>

- on/energy/news/sakhalin-exception-the-russian-energy-japan-cant-quit/> (검색일: 2023.8.13.).
- “ロシアとの平和条約締結目指す方針、今後も維持 = 岸田首相.”
REUTERS, 2022.3.22. <<https://jp.reuters.com/article/russia-kishida-idJPKCN2LJ088>> (검색일: 2023.6.1.).
- “北方領土「不法占拠」復活 外交青書、対露融和色消える.” 『産経新聞』, 2022.4.22.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422-NKO6UEK2EZKYTPMM2JP6NW6OVY/>> (검색일: 2023.6.2.).
- “「軍国主義者と呼びたいならどうぞ」…米国で安倍首相が大胆な発言.” 『中央日報』, 2013.9.27. <<https://s.japanese.joins.com/JArticle/176532?sectcode=A00&servcode=A00>> (검색일: 2023.4.29.).
- “「中露が手を組む事態だけは避けねば」 安倍首相が目指す日露新時代とは.” 『産経新聞』, 2019.1.23. <<https://www.sankei.com/article/20190123-SW72VPRMOJNULCOXYF463W2QPI/>> (검색일: 2023.6.1.).
- “「台湾情勢の安定重要」 防衛白書に初明記.” 『日本経済新聞』, 2021.7.13.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93K00Z00C21A7000000/>> (검색일: 2023.4.29.).
- “ロシア、日本外交官8人追放へ 報復措置.” *REUTERS*, 2022.4.28. <<https://jp.reuters.com/article/ukraine-crisis-russia-japan-idJPKCN2MJ1G8>> (검색일: 2023.6.1.).
-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略を非難する決議.” 衆議院, 2022.3.1.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html/statics/topics/ketugi220301.html> (검색일: 2023.6.1.).
- “ロシア連邦 過去の要人往来・会談”. 外務省, 2022.9.27. <<https://www.mofa.go.jp/mofaj/area/russia/visit/index.html>> (검색일: 2023.6.1.)

- “防衛白書、中国への言及最多 「国際社会の深刻な懸念」警戒感あらわ.” 『朝日新聞 DIGITAL』, 2023.7.28.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R7X5JBJR7XULFA00L.html>> (검색일: 2023.8.11.).
- “北方領土特区で揺さぶるプーチン氏 構想には不透明感も.” 『朝日新聞』, 2021.9.6. <<https://www.asahi.com/articles/ASP966Q53P96IPE005.html>> (검색일: 2023.7.15.).
- “北朝鮮ミサイル, 政府が追加制裁 5団体の資産凍結.” 『日本経済新聞』, 2023.10.18.
- “首相「一切の措置撤回を」 中国の防空識別圏設定.” 『日本経済新聞』, 2013.11.25.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S2503T_V21C13A1EA2000/> (검색일: 2023.5.1.).
- “安倍・プーチン時代の日露経済関係を振り返る.” 『The Asahi Shimbun Globe+』, 2020.9.15. <<https://globe.asahi.com/article/13726266>> (검색일: 2023.5.23.).
- “安倍内閣総理大臣の中国訪問 (概要) .” 外務省, 2006.10.8. <https://www.mofa.go.jp/mofaj/kaidan/s_abe/cn_kr_06/china_gaiyo.html> (검색일: 2023.3.13.).
- “安倍外交7年8ヵ月を語る (中)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にみる戦略的思考.” 『外交』, vol. 65, Jan./Feb. 2021. <http://www.gaiko-web.jp/test/wp-content/uploads/2021/01/Vol65_p94-99_specialinterview_Shinzo_Abe.pdf> (검색일: 2023.5.13.).
- “岸田首相 北方領土はロシアの不法占拠 平和条約の見通しは困難.” *NHK*, 2022.3.17.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317/k10013537341000.html>> (검색일: 2023.6.1.).
- “安全操業交渉 再開の道筋を探りたい.” 『北海道新聞』, 2023.1.24. <<https://www.hokkaido-np.co.jp/article/791286>> (검색일: 2023.5.13.).

- 일: 2023.6.2.).
- “安定的な日中関係は双方の努力で、首脳会談など検討＝岸田首相.”
REUTERS, 2023.7.31. <<https://jp.reuters.com/article/ki-shida-china-idJPKBN2XD0IK>> (검색일: 2023.8.11.).
- “日口経済活動 甘い交渉が招いた帰結.” 『朝日新聞』, 2021.7.29.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4991878.html>>
(검색일: 2023.7.14.).
-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2+2」)共同記者会見.” 外務省, 2021.3.16.
<https://www.mofa.go.jp/mofaj/na/st/page3_003036.html> (검색일: 2023.4.29.).
- “日朝, 東南アジアで今春に2回秘密接触 高官の平壤派遣も一時検討.”
『朝日新聞』, 2023.9.29. <<https://www.asahi.com/articles/ASR9X6KR7R9XUTFK019.htm>> (검색일: 2023.10.1)
- “日中関係をどう「管理」するか.”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2.12.13.
<<https://www.yomiuri.co.jp/column/henshu/20221209-OYT8T50022/2/>> (검색일: 2023.7.9.).
- “日中国交正常化50年 世界2位と3位の経済大国 経済関係の歩み.”
NHK, 2022.9.28.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928/k10013839791000.html>> (검색일: 2023.4.2.).
- “日中首脳会談 関係改善へ緊密な意思疎通で一致も 具体화가課題.”
NHK, 2022.11.18. <<https://www3.nhk.or.jp/news/html/20221118/k10013895561000.html>> (검색일: 2023.8.29.).
- “政府内に亀裂、暗礁の対口交渉 トップ外交27回の果て.” 『朝日新聞』,
2021.5.24. <<https://www.asahi.com/articles/ASP5N5JVNP4NUTFK00P.html>> (검색일: 2023.5.13.).
- “中国、ガス田開発着々 日本は中止求める.” 『日本経済新聞』, 2015.7.
23. <<https://www.nikkei.com/article/DGXZZO76056900T20C14A8000048/>> (검색일: 2023.4.12.).

- “中国国防省、日本の防衛白書を批判 軍事的脅威「意図的に誇張」.”
REUTERS, 2023.5.22. <<https://jp.reuters.com/article/china-military-japan-idJPKBN2ZB03T>> (검색일: 2023.8.11.).
- 加藤嘉一, “中国が「林外相の訪中」を受け入れた思惑とは? “3つの観点”で読み解く.” *DIAMOND online*, 2023.4.4. <<https://diamond.jp/articles/-/320638>> (검색일: 2023.8.29.).
- 江藤名保子, “日中関係の再考: 競合を前提とした協調戦略の展開.” 『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 令和元年 第3号 (通巻第138号), 2019.8. <https://www.mof.go.jp/pri/publication/financial_review/fr_list7/r138/r138_07.pdf> (검색일: 2023.4.29.).
- 吉岡明子, “北方領土交渉はなぜ進まなかったのか——安倍政権の安保政策を振り返る(2).” キヤ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 「メディア掲載 国際交流 外交・安全保障」, 2021.1.13. <https://cigs.canon/article/20210119_5578.html> (검색일: 2023.6.1.).
- 東郷和彦, “日本の外交戦略: 北朝鮮・中国・ロシア、そして長期的ビジョン.” 平和政策研究所 「政策オピニオン」, 2018.4.9. <<https://ippjapan.org/archives/2664>> (검색일: 2023.6.1.).
- 畔蒜泰助, “岸田新政権の対ロシア外交を考える (前編): 安倍政権の日露関係とプーチンの対日シグナル.” 笹川平和財団 「国際情報ネットワーク分析」, 2021.10.27. <https://www.spf.org/iina/articles/abiru_03.html> (검색일: 2023.5.30.).
- 飯野光浩, “日中経済のデカップリングについて考える.” 『世界経済評論IMPACT』, 2022.10.24. <<http://www.world-economic-review.jp/impact/article2719.html>> (검색일: 2023.9.4.).
- 防衛省, “令和3年版 防衛白書.” 2021.9.1.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21/w2021_00.html> (검색일: 2023.

- 5.13.)
- _____. “北朝鮮による核・弾道ミサイル開発について.” 2023.2. <http://www.mod.go.jp/j/surround/pdf/dprk_bm_2023.pdf> (검색일: 2023.6.13.).
- _____. 日米韓防衛相会談共同声明. 2022.6.11.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area/2022/20220611_usa_kor-j.html> (검색일: 2023.6.13.).
-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調査室.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rchome.nsf/html/rchome/Shiryo/doukou207rachi.pdf/\\$File/doukou207rachi.pdf](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rchome.nsf/html/rchome/Shiryo/doukou207rachi.pdf/$File/doukou207rachi.pdf)> (검색일: 2023.6.13.).
- 小林英治, 松嶋希会. “日本政府による対ロシア経済制裁.” *BUSINESS LAWYERS*. 2022.8.30. <<https://www.businesslawyers.jp/articles/1136>> (검색일: 2023.7.14.).
- 外務省. アントニー・ブリンケン米国国務長官、林芳正日本国外務大臣及び朴振(パク・チン) 韓国外交部長官による共同声明.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350254.pdf>> (검색일: 2023.6.13.).
- _____. “中国経済 概要.”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07735.pdf>> (검색일: 2023.9.4.).
- 自由民主党. “総裁選2021 候補者プロフィール.” <https://www.jimin.jp/election/results/sousai21/profile/kishida_fumio.html> (검색일: 2023.6.13.).
- “Заседание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Валдай».”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21.10.21.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6975>> (검색일: 2023.4.27.).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한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한·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동체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Choon Geun Lee·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합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외식조사 2022	박주하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추진방안	현승수 외
2023-10	KINU 통일외식조사 2023	이상신 외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김민성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윤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Study Series〉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KINU Insight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기타

- | | | |
|------|---|------------|
| 2021 |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 서보혁·용혜민 엮음 |
| 2022 |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 홍 민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